



신북방정책과 ODA전략 연계 방향 연구

2019. 12

신북방정책과 ODA전략 연계 방향 연구

2019. 12.

한국국제협력단

저자

책임연구원

윤 유 리

-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정보센터 연구원/과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무역학) 박사

주요 연구 실적

- ▷ 2019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과정검토Ⅳ” 개발과이슈 제59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9 “선진국의 중진국 원조 출구전략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9 “2030 어젠다 달성을 위한 GPEDC의 역할 및 한국의 기여 방안” 개발과이슈 제53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8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과정검토Ⅲ” 개발과이슈 제46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8 “중국 일대일로와 일본 커넥티비티 이니셔티브를 통해 본 KOICA의 함의” 개발과이슈 제43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7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과정검토Ⅱ” 개발과이슈 제39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7 “KOICA 무상원조의 국내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패널 중력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개발과이슈 제29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공동연구원

김 성 은

-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정보센터 연구보조원
-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학 석사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문 요약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함께 신북방정책을 필두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對북방 정책은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진출로 확보 및 시장 다각화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정치·외교적 협력 확대를 통해 신냉전체제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의 G2 중심의 안보외교에서 확장하여 신남방 및 신북방 중심의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對북방 지역 정책 추진은 역대 정부에서부터 지속해서 확대되어 왔으나, 남북관계의 긴장에 따른 추진의 어려움 및 협력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제한된 상황 속에서 구체성 및 실행방안이 다소 결여된 형태를 보여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협요인은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으나,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나진·하산 물류 사업 및 철도·전력망 사업 등에 대한 협력에 기반하여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나아가 러시아, 중국, 유라시아로 진출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천하고자 한다.

신북방정책 대상 14개국 중 러시아 및 중국을 제외하고 7개국이 OECD DAC 기준으로 중저소득국에 해당하며, 5개국이 중고소득국에 해당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90년대 체제 전환기를 거치며 2000년대 후반부터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위 중소득국으로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 다각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각국의 정책 방향성을 고려한 ODA지원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신북방경제권은 유라시아대륙 북부 및 중동부의 내륙 국가들로 다양한 민족과 종교로 구성된 신흥경제국이면서도,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 속에서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주로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 등을 바탕으로 2017년 4.0%, 2018년 4.2%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며 중장기적으로도 경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다소 느린 성장을 보여온 신북방지역은 최근 역내 경제 통합 및 개방을 가속화하며, 인접국 간의 국가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는 최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하며, 그동안 다소 폐쇄적이고 에너지·광물에 의존하던 경제체제에서 개혁과 개방을 전면 내세우며 차별화를 모색하며 내륙국 및 이중내륙국의 지리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부터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다각화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OECD에 보고된 2017년 신북방지역 수원 규모는 5,474백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3년 동안 약 4%,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약 5%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원조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나, 절대적인 규모에서의 원조 성과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ODA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GNI 대비 비중은 감소세를 보인다. ODA 규모의 문제보다는 산업 다각화 등을 모색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 수출, 민간 활성화 등의 마중물 역할로써 ODA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OICA는 2018년 기준 신북방정책 대상 지역 내 11개국(아시아 1개국, 동구 및 CIS 10개국)에 38,328백만원 지원 하였으며, 이는 전체 국별 지원 총액 526,768백만원 대비 7.28% 규모에 달한다. 이 중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은 KOICA 지원 규모 상위 20개국 중 각각 11번째(2.7%)와 12번째(2.7%)를 차지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라는 비전’ 하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제고하고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대외정책으로, 4대 목표 16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부처별 6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기존 성과 및 한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심의 협력 하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발표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을 거점으로 삼고 2023년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교역 규모를 현재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도로·철도·공항, 플랜트,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신북방정책에서 ODA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신북방정책 내 KOICA는 CPS상 각 중점협력 분야에 따라 진행 중인 양자 무상원조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만 언급되어 있다. 신북방정책은 정부 부처 중심의 정책으로 각 부처에서 신북방경제권과의 협력이라는 정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분야별 진출 전략에 ODA를 연결 고리로 활용하는 의미가 큰 만큼, ODA 자체가 주된 목적은 아니겠으나, 신북방전략 내 전체 ODA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KOICA의 역할이 미미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OICA 역시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ODA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바, 향후 해당 지역 지원 전략 수립에 있어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진행 중인 KOICA 사업리스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북방정책의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공공행정 사업 및 농촌·지역개발, 인재양성 사업 등은 KOICA에서 그동안

지속해서 이어온 사업들로 신북방정책 일환 사업으로도 충분히 강점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등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일궈온 국가들은 산업 다각화를 통한 경제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으로 혁신성장 및 디지털 성장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 더욱이 최근 정권 교체 등의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 및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로는 KOICA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CT 분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정부 시스템의 디지털화 등은 국내 산업 다각화는 물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KOICA의 對중앙아시아 사업들을 살펴보면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주요사업 분야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여 KOICA의 역내 대표 사업으로 선정하여 분야별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북방정책에서의 협력을 도모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일수록, 관련 역량강화 및 행정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ODA사업을 통한 효과성 제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평균 연령이 낮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송금 경제의존도를 낮추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와 수요가 있는 가운데, KOICA에서는 이미 기존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들을 지원해 온바, 청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기술인력 및 창업 인력을 신북방정책과 함께 양성 가능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인력 양성 또는 기술 이전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관련 산업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신북방정책 내 협력사업으로 언급되는 의료분야 농축산분야 등의 산업 개발과 함께 관련 인재양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국내 다양한 지원정책과 의지 하에 효과적인 협력사업으로써 긍정적인 성과 창출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북방정책이라는 정부의 큰 프레임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한국형 경제협력사업과 한국형 ODA 사업은 서로 다르면서도 공통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기존의 KOICA가 가지고 있는 강점분야 및 개발협력사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신북방정책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큰 틀의 협력사업들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간다면, 사업의 효과성 제고는 물론 한국만의 차별화된 접근으로 그 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신북방정책의 경제협력 사업들이 시작 단계에서 구체화 되지 않은 가운데, ODA사업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많은 소통과 논의를 통한다면 신북방정책의 차별화 및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많은 후속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with the new southern policy and the new northern policy, emphasizes cooperation between nations fo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From the Korean government's perspective, the policies to the northern region aim to secure the roads to the Eurasian region and market diversification, and to reduce the possible conflicts in the region by expanding economic, political and diplomat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importance of economic diplomacy focused on New South and New North area is emphasized from expanding from G2-centered security diplomacy. The policies against the northern region for the vital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peace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continuously pursued and expanded from the previous governments, but there has been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the practical basis for cooperation due to the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that it has been evaluated as lacking concreteness and actual implementation under the limited situation. The threats still remain, yet the government based on the existing cooperation in the Najin-Hasan logistics project and other railroad and power grid projects, seeks for not only relations improv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but also advance into Russia, China and Eurasia, practicing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Map.

Of the 14 countries that are subject to New Northern policy, excluding Russia and China, seven countries are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five are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based on the OECD DAC. Since the late 2000s, some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with some countries rising to the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in order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DA strateg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policy direction of each country aiming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rough industrial diversification. The target region for the New Northern policy includes inland countries in northern and middle-east of Eurasia that are emerging economic nations composed of various peoples and religions, going through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a democratic and market economy. Mainly based on exports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the economic growth rate is expected to grow 4.0% in 2017, 4.2% in 2018, and further expand in the mid to long term. And, the governments in the area are promoting practical integrations accelerating economic development; opening up the economy and effectively linking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mong neighboring countries with reconciling conflicts in the past. Some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recently elected new president and government, seeking differentiation by pursuing industrial diversification for long term economic growth, and constructing transport logistics infrastructure to overcome the geographical weaknesses of landlocked and double-landlocked economies.

According to the OECD, in 2017 the northern area received the total ODA of 5,474million USD, and it appears the share took up to 4% of the total ODA between 2010 -2013 and to 5% between 2014 -2017. The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ems increasing while aid performance on an absolute scale is still considered poor. And the ODA generally increased in the Central Asia while its share of GNI showed a decrease. For better effectiveness of ODA, it would be more important to seek diversification and to serve as a centerpiece for investment, exports, and invite private sectors, rather than the size it self. As of 2018, KOICA provided 38,328 million KRW to 11 countries (1 Asia, 10 East Europe and CIS countries) in the New Northern Policy region, which is 7.28% of the total support of 526,768 million KRW. Mongolia and Uzbekistan are the 11th (2.7%) and 12th (2.7%) of the top 20 KOICA supporting countries.

New North Korea policy, with the vision to usher in the era of the northern economic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 is the core diplomatic policy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secure new growth engines for the Korean economy - 4 major goals, with 16 major tasks and 63 detailed tasks by departments are being promoted. The New Northern policy suggests concrete action strategies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existing performances, limitations, and the environment. While the Central Asian countries are expressing their willingness to cooperate to solve problems and lead economic growth, it can be the right time to bring about practical cooperation under the policy. Focusing on Uzbekistan, the government intends to expand its trade with Uzbekistan, Kazakhstan, Turkmenistan more than twice by 2023, and to suggest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by providing cutting -edge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railways, airports, plants, and smart cities. Yet, unlike the government positioning ODA in the forefront of the New Northern policy, KOICA's role is mentioned as continuing the bilateral aid project under the CPS. New North Korea policy is a government-centered policy wi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purpose, utilizing ODA as a mean of implementation for each sector's entry strategy. ODA itself is not the main purpose of the New Northern policy, yet the lack of KOICA's role in establishing the overall ODA strategy within the New Northern policy can be somewhat dismay. On the other hand, KOICA is also required to promote ODA strategies in line with national policies. Therefore, it would need to consider the linkage with new northern policy in establishing future regional strategies.

Based on the ongoing KOICA project list, it does not deviate significantly from the direction of the New Northern policy. Projects in public administration, r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have been continuously carried out by KOICA, and they have sufficient strength to the new northern policy. Countries with economies based on energy resources, such as Central Asia, have shown considerable interest in innovation and digital growth, preparing for new economic growth engines from industrial diversification. Moreover, in the midst of new winds such as the change of regime, the government is developing related strategies by suggesting economic efficienc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to maintain the new regime. And KOICA's project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sectors may meet these demands; utilizing the strengths of the ICT field, digitization of various government systems w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diversification of domestic industry and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OICA's projects share in Central Asia shows that public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is considerably higher than in other sectors, possibly providing good basis in seeking cooperation business in New Northern policy. In particular, the larger th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the greater the likelihood of improving its effectiveness through various ODA projects, such as strengthening its related capabilities and establishing an administrative system. Further more, while the governments in Central Asian countries are putting efforts lowering the dependency on the remittance economy and revitalizing start-ups to create youth jobs, KOICA has already supported various start-up support projects. Quality job can not be created simply by nurturing manpower or transferring technology, and related industrial development must be carried out together. Hence if the education projects including nurturing manpower and transferring technology can be promoted along with the industrial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major sectors of the New Northern policy, such as medical and agriculture, it can be expected to create effective results and improving the economic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as well.

The 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and the Korean ODA project, which are presented within the government's big frame of New Northern policy, are clearly different but have commonalities. Utilizing the existing development cooperation infrastructures and strengths of KOICA, and taking to the same direction as the large-scale cooperation projects presented in the New Northern policy, it will not only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but also differentiate Korea's unique approach leading the relationships. As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of the policy have not yet been specified,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on ODA projects is still open, and through active discussions it will be able to differentiate from previous policies and achieve actual results. It is also believed that further researches should be followed.

목 차

국문요약	i
Abstract	iv
I. 서론	1
II. 북방국가 경제 및 개발협력 현황	4
1. 북방국가 경제개발 현황	4
2. 對북방국가 ODA현황	11
3. KOICA의 對북방국가 지원현황	16
III. 신북방정책의 개념 및 현황	25
1. 신북방정책의 의미	25
2. 신북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ODA	30
IV. 신북방정책에 따른 KOICA ODA전략 연계 방향성	35
1. KOICA 국별 무상원조 사업 전략	35
2. 주요국 지원 방향성 제언	37
V. 결론	53
참고문헌	57
별첨	62

표 목차

〈표 1〉 신북방국가(중부권역) 경제성장률	4
〈표 2〉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별 국제 경쟁력(GCI) 순위	10
〈표 3〉 2010~2017 북방경제권 ODA 지원 규모 및 GNI 대비 비중	12
〈표 4〉 북방경제권 국별 ODA 상위 5위 공여국/기관	15
〈표 5〉 신북방정책 대상 지역 지원현황	16
〈표 6〉 KOICA 1991~2018년 몽골 지원 실적	17
〈표 7〉 2010~2017년도 對몽골 한국 ODA 대비 KOICA 지원 비중	18
〈표 8〉 2019 몽골 사업리스트	19
〈표 9〉 KOICA 1991~2018년 우즈베키스탄 지원 실적	19
〈표 10〉 2010~2017년도 對우즈베키스탄 한국 ODA 대비 KOICA 지원 비중	20
〈표 11〉 2019 우즈베키스탄 사업리스트	21
〈표 12〉 KOICA 1991~2018년 아제르바이잔 지원 실적	22
〈표 13〉 2010~2017년도 對아제르바이잔 한국 ODA 대비 KOICA 지원 비중	23
〈표 14〉 2019 아제르바이잔 사업리스트	24
〈표 15〉 지역별 주요 전략	28
〈표 16〉 신북방정책 4대 목표와 16대 과제	31
〈표 17〉 KOICA CP 5대 수립방향	36
〈표 18〉 몽골 국가협력전략 중점협력 분야별 지원방향 및 KOICA 지원방향	38
〈표 19〉 몽골 2019~2022년 진행사업	39
〈표 20〉 주요 몽골 현황	40
〈표 21〉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 중점협력 분야별 지원방향 및 KOICA 지원방향	42
〈표 22〉 우즈베키스탄 2019~2021년 진행사업	43
〈표 23〉 키르기스스탄 2019~2021년 진행사업	45
〈표 24〉 중앙아 3국 2019~2021년 진행사업	46
〈표 25〉 주요 중앙아시아 현황	47
〈표 26〉 아제르바이잔 국가협력전략 중점협력 분야별 지원방향 및 KOICA 지원방향	49
〈표 27〉 아제르바이잔 2019~2021년 진행사업	50
〈표 28〉 주요 코카서스 현황	51

그림 목차

〈그림 1〉 2010~2017년도 전체 ODA 대비 북방경제권 대상 ODA 비중	12
〈그림 2〉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협력 현황	14
〈그림 3〉 몽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상위 5위 공여기관 지원 규모	15
〈그림 4〉 우즈베키스탄, 몽골, 아제르바이잔 대상 2016~2017 평균 양자 ODA 분야별 비중	16
〈그림 5〉 KOICA 1991~2018년 몽골 ODA 지원 규모 추이	17
〈그림 6〉 2018년 몽골 ODA 사업유형별 및 분야별 현황	18
〈그림 7〉 1991~2018년 우즈베키스탄 ODA 지원 규모 추이	20
〈그림 8〉 2018년 우즈베키스탄 ODA 사업유형별 및 분야별 현황	21
〈그림 9〉 KOICA 1991~2018년 아제르바이잔 ODA 지원 규모 추이	22
〈그림 10〉 2018년 아제르바이잔 ODA 사업유형별 및 분야별 지원현황	23
〈그림 11〉 신북방대상국	27
〈그림 12〉 중앙행정기관 '19년도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재구성	29

1. 서론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함께 신북방정책을 필두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對북방 정책은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진출로 확보 및 시장 다각화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정치·외교적 협력 확대를 통해 신냉전체제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남북관계 개선도 포함된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지정학적 경쟁 구도를 감안할 때, 그동안의 G2 중심의 안보외교에서 확장하여 신남방 및 신북방 중심의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북방¹⁾ 지역은 지리적 근접성이 높은 반면 유사 근접 지역에 비해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북방지역에 대한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왔다. 더욱이 장기화되고 있는 무역 갈등과 지속되는 남북·북미 관계의 불확실성 등의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들 속에서,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다시금 강조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 및 추진 과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對북방 지역 정책 추진은 역대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나, 남북 관계의 긴장에 따른 추진의 어려움 및 협력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일관성 및 지속성 있는 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구축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간의 현실은 제한된 상황 속에서 구체성 및 실행방안이 다소 결여된 형태를 보여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궁극의 외교적인 목표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을 통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²⁾

1988년 노태우 정부의 소련과의 국교수립으로 시작된 북방협력의 모색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으며,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세계화 정책하에 북방국가와의 외교 관계 강화 및 국제기구에서의 역할과 위상 정립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에서는

- 1) 북방이란 EU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유라시아대륙의 북부 및 중·동부에 위치한 신흥경제권
- 2) 북방정책이란 1988년부터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대공산권 외교 정책으로 일명 북방정책이라고도 함. 북방외교는 중국·소련·동유럽국가·기타 사회주의국가 및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 정책으로, 중국·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이익의 증진과 남북한 교류·협력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와의 외교 정상화와 남북한 통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북방국가들과의 수교를 바탕으로 햇볕정책 및 평화번영정책 등의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을 추구하며,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러시아와의 철도 및 천연가스 관련 구체적인 협의를 진전시키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 아시아를 포괄하는 신아시아 외교로 전환하며,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와의 가스관 사업 등을 통한 자원외교를 추진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비록 출범 2년여 만에 대내외적 요인으로 중단에 이르게 되었으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향후 한국의 신성장동력 및 경제시장 확대라는 도전과제에 이상적인 방향성을 갖춘 전략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나진·하산 물류 사업 및 철도·전력망 사업 등에 대한 협력에 기반하여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나아가 러시아, 중국, 유라시아로 진출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천하고자 한다. 여전히 북핵 문제 미해결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위협요인으로 존재하고는 있으나, 신북방정책은 평화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유라시아 경제권 진출 및 균형 외교 수립 등의 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기회 요인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2019년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신북방국가 순방은 다시금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이를 통해 실질적 사업 및 관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후속 노력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북방정책 대상 14개국 중 러시아 및 중국을 제외하고 7개국이 OECD DAC 기준으로 중저소득국에 해당하며, 5개국이 중고소득국에 해당된다. 따라서 극동 러시아 지역 대상으로는 경제개발협력 위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업은 주로 ODA와 공공외교 사업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체제 전환기를 거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일부 국가들의 경우 상위중소득국으로 올라서며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감안할 때, ODA지원 전략 수립에 있어 산업 다각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각국의 정책 방향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북방지역 개발협력 연구는 대체로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Sievers(2003)는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의 발전현황을 고찰하며, 역사 및 문화의 다양성으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확산을 위한 원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이라고만은 평가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Kment(2014)에 의하면 중앙아시아의 ODA와 빈곤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ODA를 통해 빈곤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성과를 보이는 개발협력 분야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데이터 부족 등으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ODA 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외교 정책 및 시장경제 도입의 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보았다. 국내 연구로는 이정희(2015)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회 형성 등 국제사회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업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김태황(2016)은 중앙아시아 국가별 ODA 추이를 분석하며, 2000년 대비 2013~2014년의 중앙아시아 5개국의 ODA수원실적은 변동성이 높으며, GNI 대비 ODA 비중이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들 간 교역 확대 규모 대비 ODA 실적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ODA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신북방정책에 따라 관계부처에 관련 전략 수립 및 과제 수행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외교 파트너십 구축에 ODA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이렇듯, 북방지역의 특성은 개발협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반면, 관련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신북방정책에 대비한 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에 부응하는 ODA 추진이 요구되는 만큼, 무상원조 대표기관으로써 KOICA의 역할 또한 신북방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전략 수립 및 방향성 제시를 위한 신북방정책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북방지역과의 협력의 중요성 및 신북방정책의 의미를 살펴보고, 신북방정책의 ODA 방향성과 북방지역 내 KOICA 지원 대상국 중심으로 기존 전략 및 방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신북방정책과 북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KOICA의 지원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북방국가 경제 및 개발협력 현황

1. 북방국가 경제개발 현황

신북방경제권은 주로 非EU국가로 유라시아대륙 북부 및 중동부 국가이자 신흥경제국을 일컫는다. 중국, 러시아, EU 사이에 내륙 국가들로 다양한 민족과 종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련 해체 이후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 속에서,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는 지역 이기도 하다. 다양한 장애요인이 포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북방경제권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수출 등으로 꾸준히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으며, 2017년 4.0%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2018 4.2%, 2019년~2020년 4.4% 성장률을 예상하며,³⁾ 중장기적으로도 경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 신북방국가(중부권역) 경제성장률

국가	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몽골	GDP 성장률	7.89	2.38	1.17	5.34	7.23	
	GDP 대비 산업 부가가치	31.50	31.04	33.88	38.36	38.72	
	15~64세 인구비율	67.79	67.27	66.65	66.06	65.51	
	실업률	4.80	4.86	7.24	6.36	6.32	6.35
	GDP 대비 수출입	90.07	72.06	73.96	92.23	98.62	
우즈베키스탄	GDP 성장률	7.18	7.45	6.09	4.46	5.12	
	GDP 대비 산업 부가가치	23.28	23.72	24.14	24.72	28.42	
	15~64세 인구비율	67.58	67.59	67.47	67.22	66.89	
	실업률	5.09	5.15	5.16	4.97	5.22	5.50
	GDP 대비 수출입	33.17	25.54	24.82	37.91	56.48	
카자흐스탄	GDP 성장률	4.20	1.20	1.10	4.10	4.10	
	GDP 대비 산업 부가가치	33.21	30.85	31.98	32.33	33.50	
	15~64세 인구비율	67.20	66.54	65.77	64.95	64.15	
	실업률	5.06	4.93	4.96	4.90	4.89	5.43
	GDP 대비 수출입	54.54	41.50	45.25	46.82	52.13	

3) IMF(2019):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국가	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투르크 메니스탄	GDP 성장률	10,30	6,50	6,20	6,50	6,20	
	GDP 대비 산업 부가가치	60,67	56,97	n/a	n/a	n/a	
	15~64세 인구비율	65,72	65,48	65,01	64,81	64,75	
	실업률	3,90	3,84	3,80	3,69	3,78	3,85
	GDP 대비 수출입	63,18	47,49	33,05	31,72	30,67	
타지 키스탄	GDP 성장률	6,71	6,01	6,87	7,62	7,30	
	GDP 대비 산업 부가가치	22,60	24,39	27,24	27,00	27,40	
	15~64세 인구비율	61,38	61,22	60,91	60,56	60,19	
	실업률	11,65	11,35	10,99	10,74	10,92	11,08
	GDP 대비 수출입	57,88	55,09	56,52	55,51	48,60	
키르기스 스탄	GDP 성장률	4,00	3,90	4,30	4,70	3,50	
	GDP 대비 산업 부가가치	23,89	25,08	26,55	27,31	27,46	
	15~64세 인구비율	64,56	64,16	63,72	63,41	63,15	
	실업률	8,05	7,56	7,21	6,89	7,17	7,36
	GDP 대비 수출입	102,15	82,52	81,80	81,25	82,44	
아제르 바이잔	GDP 성장률	2,80	1,05	-3,06	-0,28	1,41	
	GDP 대비 산업 부가가치	53,59	44,89	47,56	49,70	52,21	
	15~64세 인구비율	71,55	71,39	71,03	70,72	70,44	
	실업률	4,91	4,96	5,00	5,00	5,22	5,40
	GDP 대비 수출입	49,77	48,63	57,03	59,03	69,24	
조지아	GDP 성장률	4,40	3,00	2,90	4,80	4,80	
	GDP 대비 산업 부가가치	18,70	19,15	19,26	20,21	19,92	
	15~64세 인구비율	67,05	66,68	66,25	65,80	65,34	
	실업률	14,62	14,08	13,97	13,93	14,11	14,25
	GDP 대비 수출입	65,03	63,56	62,13	65,72	70,87	
아르 메니아	GDP 성장률	3,60	3,20	0,20	7,50	5,20	
	GDP 대비 산업 부가가치	25,27	25,71	25,58	25,81	24,98	
	15~64세 인구비율	69,29	69,04	68,76	68,45	68,11	
	실업률	17,50	18,26	17,62	17,83	17,71	17,71
	GDP 대비 수출입	50,99	44,76	48,03	55,81	59,32	

자료: World Bank Data (검색일: 2019.12.12.)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90년대 초반 독립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면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01~15년간 경제성장률을 보더라도, 러시아(4.5%), 중앙아시아(6.9%), 몽골(7.3%) 등은 해당 기간 세계성장률(3.4%)을 크게 상회하는 등⁴⁾ 많은 잠재력을 갖춘 곳으로 최근 역내 경제 통합 및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특성상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만큼, 러시아 경제침체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개발은 여전히 지연되어왔다. 또한 내륙 국가의 지리적 한계 및 체제 전환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은 대내외 투자 등을 저해하며 국제교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다소 느린 성장을 보여온 신북방지역은 최근 러시아 및 중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협력체를 구성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추세 속에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고자 한다. 인접국 간의 국가발전전력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대유라시아 정책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외에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으로 확대하며 무역 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며, 또한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유라시아대륙 횡단에 교통 물류망의 요지라는 지정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신동방정책을 통해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정책을 발표하며 중·동구,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을 아우르는 전략을 추진하여 육상 및 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몽골 또한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몽-중-러 경제회랑 프로그램을 확정한 바 있으며, 몽골은 지리적 위치를 적극 활용하여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자 한다. 동북아 지역개발 계획에 적극 참여 및 활용함으로써 유라시아 관문 역할을 꾀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내륙국가의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몽골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동으로 투자 위험도가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핵심개발정책기획법⁵⁾’과 ‘지속가능개발계획(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4) 이해정, 이용화(2017)

5) 2015년 11월 몽골 정책의 안정성, 계승성과 상호연관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하며, 7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정함. ① 국가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부응, ② 종합성, 체계성과 상호 연계성 구축, ③ 정부 정책 계승성 유지, ④ 조사와 연구에 기초, ⑤ 몽골의 잠재성에 기반, ⑥ 투명하고 공개적, ⑦ 국민의 의견 반영: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о төлөвлөлтийн хууль, 2015.11.26, 5 дугаар зүйл,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о төлөвлөлтөд баримтлах зарчим, (김보라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몽골 신경제 정책방향과 한몽 경제협력” 전문가 회의 회의자료 발췌)

2030'을 제정하며,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2020년 총선과 2021년 대선이 있어 여전히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⁶⁾이 활성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중앙아시아 국가 들은 소련 해체 이후 격변기를 거치며 경제침체기에 들었으나, 자원 및 에너지를 발판으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부는 최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하며, 그동안 다소 폐쇄적이었던 것에서 개혁과 개방을 전면 내세우며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광물에 의존하던 경제체제에서, 내륙국 및 이중내륙국의 지리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부터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 다각화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⁷⁾로, 2016년 신정부 수립 이후 전면적 평가 및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5개년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발전전략(2017~2021)을 발표하며 광범위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을 주요 경제파트너로 유지⁸⁾하며, 동시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2023년까지 세금 개혁 및 국영기업 축소 등의 자유 시장주의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 개혁을 위해 재정확장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는 세금 개혁, 투자 및 사회 지출 증가의 형태로 나타나며 GDP 평균 연간 적자의 1.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및 러시아의 경기 침체, 국제 원자재 가격 등락에 따라 외환 수급 불안정으로 화폐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나, 외국 자본 유입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2021년~23년 미국 달러 대비 솜(som)화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⁹⁾

카자흐스탄은 2019년 3월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사임과 함께 토카예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독립 이후 처음 대통령이 바뀌었다. 초대 대통령의 사임이 면밀한 사전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대외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초대 대통령 때부터 경제발전 전략 2050의 일부로서 누를리 졸 중장기

6) 2018.3.15. 카자흐스탄에서 지역협력 문제 논의를 위해 13년 만에 중앙아시아 실무 정상회의 개최,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현황 점검을 위해 18.7월 중앙아시아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 강화 추세 - 외교부 2019 키르기스스탄 개황

7) 중앙아시아 전체 인구의 약 45% 보유 및 중앙아 모든 국가와 국경을 접경하고 있음.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 역내 선린우호 관계 강화하며 중앙아시아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 구축 - 외교부 2019 우즈베키스탄 개황

8) 물류 환경 측면에서도 TSR과 TCR에 의존도가 높아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은 거의 필수. 이 외에도 항공 등으로 인해 높은 물류비용은 여전히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9) EIU report: 우즈베키스탄

국가발전전략(2015)¹⁰⁾에 따라 아스타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간선 도로건설, 카스피해 항만 단지 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의 협력으로 물류 루트의 중심지로 부상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시장에서의 위상 확대를 위해 새로운 무역 관계 수립을 위한 무역 사절단 네트워크 구축, 무역정책 센터를 기반으로 단일화, 시장진출 장벽 제거를 위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내 대표부 업무 강화 등의 수출 촉진 로드맵 수립을 계획 하고 있다.¹¹⁾ 이 외에도 자국의 주권 및 안보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지나친 의존을 피하려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주변국들과의 관계 또한 유지 및 발전시키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 최빈국으로 1994년 라흐몬 대통령이 당선된 후, 현재까지 4선 대통령으로 집권 중이다. 독립 이후 내전으로 인해 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낙후된 국가로 목화 및 농산물 수출이 주요 수입원이며, 지리적 접근성에 어려움이 많아 외국인의 투자 유치에 불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2014~2015년 러시아의 경제침체에 따라 타지키스탄도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근 러시아 경제회복세에 함께 회복세를 보인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중기개발전략 2016~2030하에 에너지 효율 강화, 식량안보 강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 자유지역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수자원 부국이자 세계적으로도 풍부한 수자원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¹²⁾ 활용도가 낮으며 에너지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¹³⁾ 및 석유 등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GDP의 50% 및 재정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가스관을 이용해야 하는바,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스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지나 對중국, 그리고 對이란

10) 운송·물류 인프라, 산업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난방·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사회인프라, 중소기업지원 등 7개 분야를 대상

11)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경제 동향 카자흐 경제산업 동향 7.16-31

12)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수자원 부존량의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8위의 풍부한 수자원 잠재력 보유(연간 5,270억 KWh 전력 생산 가능)하고 있음. 또한 수자원 문제 해결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지원 유치를 위해 물 문제 관련 국제회의 개최하며 물분야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임. UN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 국제행동 10년(2018-2028)에 관한 고위급 국제회의 개최 등 국가적인 관심이 많은 분야임 - 외교부 2019 타지키스탄 개황 및 외교부 유라시아과(2019)

13) 천연가스 매장량 19.5조㎥으로 세계 4위 - 외교부 투르크메니스탄 약황

가스관을 개통하였으나, 현재는 이란 가스공급 중단으로 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⁴⁾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 사회 불안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2018년 대중국 수출 증대는 불균형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질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對인도 가스 파이프 라인 구축 사업 등의 정부 주력 인프라 사업도 지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¹⁵⁾

키르기스스탄은 아직 정치적으로 다소 불안정하다는 평가가 있으나, 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비롯되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 평균보다 상회하는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 활동을 통한 소득은 2019년 말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 등의 이웃 국가들과의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확대 및 발전을 토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며, 중국과의 협력으로 우즈베키스탄까지의 철도 노선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국가지속가능개발전략 및 중기개발전략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및 경제 분야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및 제조업 육성을 통해 경제구조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2020~2022 사회·경제적 발전 중기 예측에 따르면, 평균 명목 임금은 연간 5%씩 성장하여 2022년에는 19,500숨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코카서스 3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상으로는 아시아로 분류 되면서도 문화 역사적으로는 동유럽에 더 근접하다. 아제르바이잔은 일함 알리에프(Ilham Aliyev) 대통령이 2018년 압도적인 다수로 4번째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실질 GDP 성장률을 2020년 2.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석유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는 경제 다각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¹⁶⁾ 또한 非에너지 부문에 투자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산업기반을 강화하며 중공업기계, 농산물 생산 가공 등을 육성하고자 한다. 한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오랜 영토분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신북방정책에서는 지리적으로 코카서스 3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양국 간의 협력은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아르메니아는 산악국가로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이를 수출하고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019년~2023년 실질 GDP 성장률을 평균 4.7%로 내다보고 있으며,¹⁷⁾ 정부는 협소한 내수

14) 외교부 2019 투르크메니스탄 개황

15) EIU report: 투르크메니스탄

16) EIU report: 아제르바이잔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품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며, 전통 수출 산업인 광업, 금속가공 외에도 재생에너지 및 관광산업으로도 발전을 모색하고, 스마트국가 건설을 위한 디지털 어젠다를 강조하고 있다. 조지아는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정부프로그램 2018~2020을 발표하고, FDI 등의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산업 육성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및 무역 허브로 자리 잡고자 한다. 2019년~2023년 실질 GDP 성장률이 4.6%로 예상되며,¹⁸⁾ 원자재, 조제 식료품 중심으로 수출 산업과 운송 물류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중국과 몽골을 제외한 신북방대상국은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는 시점에 독립 국가로 출범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러시아, 중국, 인도와 인접 지역에 대한 에너지 자원의 공급처이자,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보이나, 최근의 정부 정책 등은 시장경제 개방에 적극적인 형태를 보이며, 산업 다각화를 통한 경제개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별 국가 경쟁력 지수¹⁹⁾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순위에 분포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별 국제 경쟁력(GCI) 순위

순위	국가	점수	2018년도 대비	
			순위	점수
13	한국	79.6	+2	+0.8
28	중국	73.9	-	+1.3
43	러시아	66.7	-	+1.1
55	카자흐스탄	62.9	+4	+1.1
58	아제르바이잔	62.7	+11	+2.7
69	아르메니아	61.3	+1	+1.4
74	조지아	60.6	-8	-0.3
85	우크라이나	57.0	-2	-
86	몰도바	56.7	+2	+1.2

17) EIU report: 아르메니아

18) EIU report: 조지아

19) WEF는 지원환경(Enabling Environment), 인적자본(Human Capital), 시장(Market),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의 4개 분야 내 총 12개 부문에 대해 평가하여 국제경쟁력지수를 발표함

순위	국가	점수	2018년도 대비	
			순위	점수
96	키르기스스탄	54.0	+1	+1.0
102	몽골	52.6	-3	-0.1
103	타지키스탄	52.4	-2	+0.2

※ WEF에서 14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신북방정책 대상국으로는 11개국이 있음.

자료: World Economic Forum 2019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하면 유라시아²⁰⁾ 역내에서는 러시아가 43위로 가장 상위이며 타지키스탄이 가장 하위로, 이들 둘 국가는 점수로는 14점, 순위로는 60위 차이를 보였다. 전체 141개국 중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은 타지역 내 차이에 비하면 비교적 좁은 편으로, 이는 편차가 큰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역내 협력이 수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물류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 의하면 평가대상 190개국 중 조지아 7위, 카자흐스탄 25위, 러시아 28위, 중국 31위, 아제르바이잔 34위 등²¹⁾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발전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2. 對북방국가 ODA현황

신북방정책 대상국 중 대다수는 개발도상국으로, 몰도바, 몽골,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중저소득국(LMIC)에 속하며,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중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고소득국(UMIC)에 해당된다.²²⁾ OECD에 보고된 2017년 신북방지역 수원 규모는 5,474백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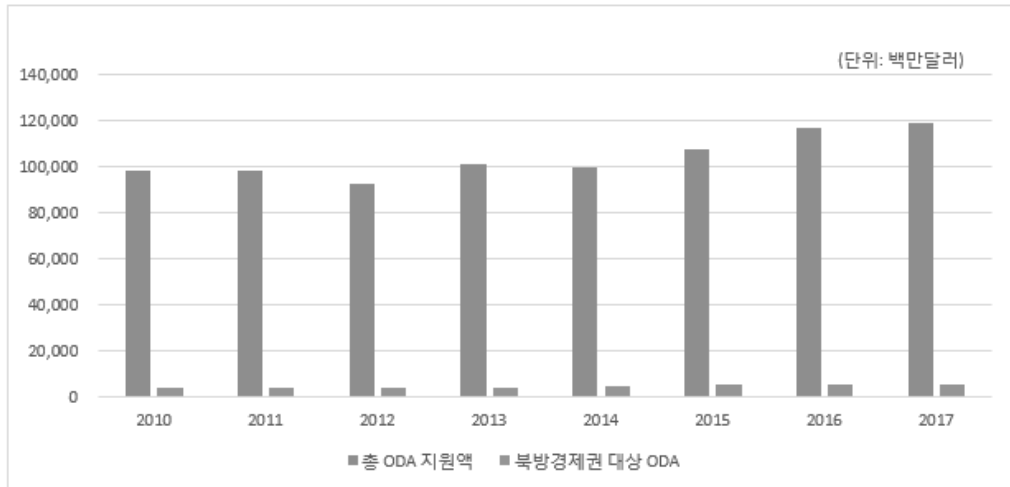
20) WEF 2019에서의 유라시아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총 9개국이 해당됨. 몽골은 남아시아지역으로 분류함.

21) 아르메니아 47위, 몰도바 48위, 벨라루스 49위, 우크라이나 64위, 우즈베키스탄 69위, 키르기스스탄 80위, 몽골 81위, 타지키스탄 106위로 나타남. 1위는 뉴질랜드이며, 한국은 5위를 차지함.

22) OECD DAC Recipient List 2018-2020

23) OECD 2018년도 자료는 예비수치로 매우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제외. (2019.12월 기준)

〈그림 1〉 2010~2017년도 전체 ODA 대비 북방경제권* 대상 ODA 비중



* 러시아 중국을 제외한 총 12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접속일: 2019.11.18.)

전체 ODA에서 신북방국가 대상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3년 동안 약 4%였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약 5%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최대 공여국은 미국, 터키, 러시아, 일본, 독일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원조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나, 절대적인 규모에서의 원조 성과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 2010~2017 북방경제권 ODA 지원 규모 및 GNI 대비 비중

(단위: 백만달러, %)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ODA	GNI 대비	ODA	GNI 대비	ODA	GNI 대비	ODA	GNI 대비	ODA	GNI 대비	ODA	GNI 대비	ODA	GNI 대비	ODA	GNI 대비
아르메니아	365	3.5	405	3.8	313	2.5	300	2.4	283	2.2	424	3.2	426	3.0	367	2.1
아제르바이잔	180	0.3	271	0.5	279	0.4	257	-0.1	252	0.3	168	0.1	192	0.2	250	0.3
벨라루스	118	0.2	89	0.2	82	0.2	96	0.1	108	0.2	113	0.2	119	0.0	130	-0.5
조지아	642	5.6	595	4.2	677	4.2	663	4.1	630	3.4	575	3.3	575	3.4	572	3.1
카자흐스탄	189	0.2	183	0.1	119	0.1	129	0.0	91	0.0	130	0.0	132	0.1	112	0.0
키르기스스탄	330	8.6	433	9.4	360	7.3	363	7.8	372	8.7	882	12.0	664	8.0	550	6.3
몰도바	430	6.3	399	5.1	436	5.0	329	3.4	511	5.0	382	3.8	343	3.1	319	2.4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ODA	GNI 대비	ODA	GNI 대비	ODA	GNI 대비	ODA	GNI 대비	ODA	GNI 대비	ODA	GNI 대비	ODA	GNI 대비	ODA	GNI 대비
몽골	321	4.6	356	3.7	453	3.9	452	3.6	338	2.8	306	2.2	386	3.2	841	7.8
타지키스탄	407	6.2	304	4.2	371	4.0	368	3.5	340	3.1	491	4.6	426	4.2	396	3.7
투르크메니스탄	30	0.2	29	0.2	27	0.1	23	0.1	25	0.1	27	0.1	36	0.1	32	0.1
우크라이나	606	0.5	660	0.5	700	0.4	703	0.4	1,263	1.1	1,511	1.6	1,606	1.6	1,205	1.1
우즈베키스탄	242	0.6	221	0.4	275	0.5	310	0.5	347	0.4	523	0.5	578	0.6	700	1.1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 및 The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
(접속일: 2019.11.18.)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ODA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GNI 대비 비중은 감소세를 보인다. 이는 자국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ODA의 기여도 약화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ODA 규모의 문제보다는 산업 다각화 등을 모색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 수출, 민간 활성화 등의 마중물 역할로서의 ODA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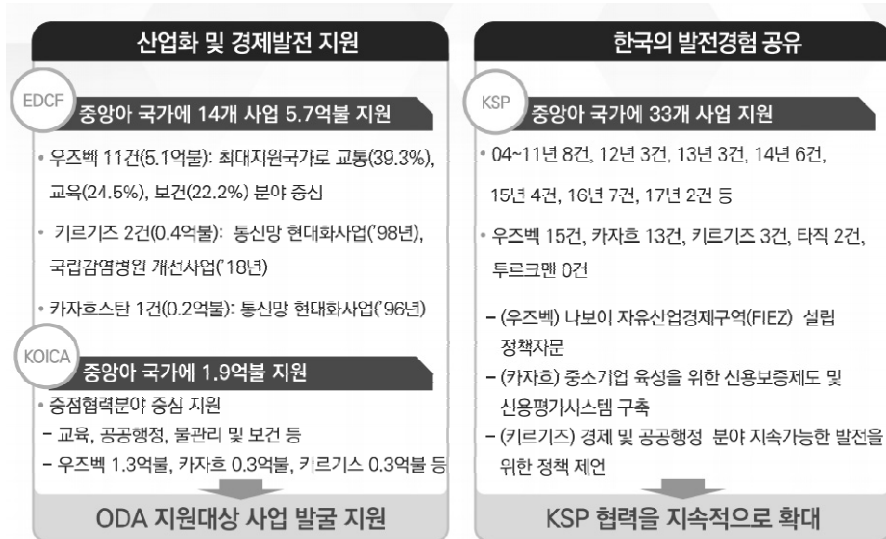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한정된 원조재원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중점협력국을 선정²⁴⁾하고 있다. 2011년부터 유·무상통합 중점협력국이 적용되었으며, 신북방국가로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이 해당된다.²⁵⁾ 몽골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중동 CIS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한국의 ODA는 우즈베키스탄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협력 방향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수립되었으며 규모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이에 해당 지역에 대한 ODA 규모 확대 및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자주 강조되어왔다. 더욱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카자흐스탄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투르크메니스탄과 “호혜적 동반자 관계”의 질적 강화를 도모하며 향후 ODA전략 수립에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4) 2008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였고, 2011년 카자흐스탄 KOICA 사무소 철수함. 이후 우즈베키스탄에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분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5년 키르기스스탄에 KOICA 사무소 개설되면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대상국에 대한 다변화 작업이 진행 중.

25) 2011년 이전 무상원조 중점협력국에는 카자흐스탄이 포함되었으나, 유·무상통합하며 제외됨.

우즈베키스탄 외 다른 국가들의 소득대비 ODA 수원 실정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국가별 경제성장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각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유·무상 사업의 연계, 다양한 민관협력사업 추진, 관계기관 간 협력 플랫폼 강화 등의 다양한 접근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중앙아시아는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 증진과 자국의 경제개발 전수 등을 중점 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산업 다각화 및 무역역량 강화에 대한 개발협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 이하 AfT)와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이하 GSP)에 대한 언급도 이루어지고 있다.²⁶⁾

〈그림 2〉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협력 현황



자료: 제11차 한중아 포럼발표자료

중점협력국이자 북방경제권 대상 ODA 상위 1, 2위인 몽골 및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 지원은 일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IDA, ADB, 한국, 독일 순으로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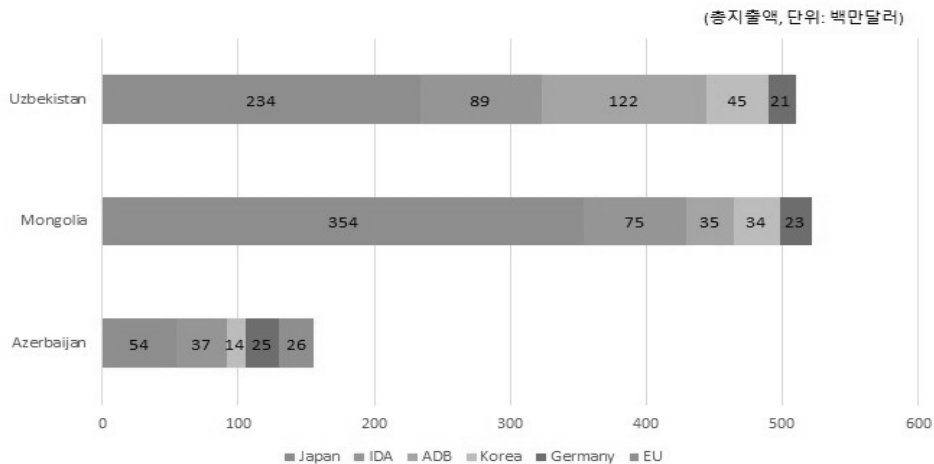
26) 박정호, 강부균, 윤지현(2017)

〈표 4〉 북방경제권 국별 ODA 상위 5위 공여국/기관

국가	1위	2위	3위	4위	5위
몽골	일본	IDA	ADB	한국	독일
카자흐스탄	미국	터키	독일	EU	Global Fund
키르기즈공화국	러시아	ADB	미국	EU	IDA
타지키스탄	ADB	IDA	미국	독일	EU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EU	미국	터키	GEF
우즈베키스탄	일본	ADB	IDA	한국	독일
아르메니아	일본	IDA	EU	독일	한국
아제르바이잔	EU	독일	프랑스	러시아	미국
조지아	EU	미국	ADB	독일	일본
벨라루스	EU	폴란드	독일	미국	스웨덴
우크라이나	EU	미국	독일	일본	Global Fund

자료: OECD DAC 바탕으로 재구성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data/aid-at-a-glanc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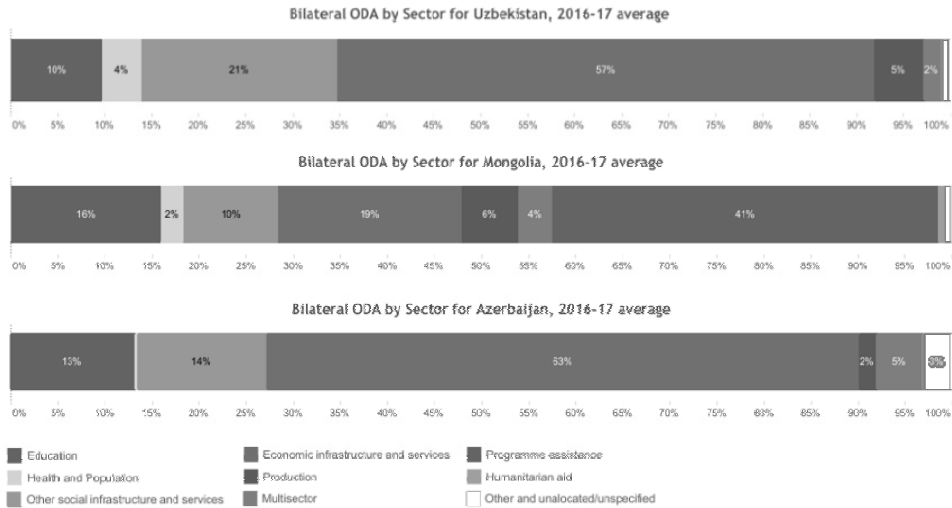
〈그림 3〉 몽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상위 5위 공여기관 지원 규모



자료 : OECD Stat (<http://stats.oecd.org/>)(접속일: 2019.04.17.)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경제 인프라·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사회 인프라·서비스와 교육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몽골은 프로그램 지원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뒤로 경제 및 사회 인프라·서비스가 뒤따르고 있다.

〈그림 4〉 우즈베키스탄, 몽골, 아제르바이잔 대상 2016~2017 평균 양자 ODA 분야별 비중



자료 : OECD (<https://public.tableau.com/>)(접속일: 2019.04.17.)

3. KOICA의 對북방국가 지원현황

KOICA는 2018년 기준 신북방정책 대상 지역 내 11개국(아시아 1개국, 동구 및 CIS²⁷⁾ 10개국)에 38,328백만원 지원하였으며, 이는 전체 국별 지원 총액 526,768백만원 대비 7.28% 규모에 달한다. 이 중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은 KOICA 지원 규모 상위 20개국 중 각각 11번째(2.7%)와 12번째(2.7%)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신북방정책 대상 지역 지원현황(2018 기준)

국가	지원액(백만원)	국가	지원액(백만원)
몽골	14,484	카자흐스탄	391
우즈베키스탄	14,184	몰도바	364
키르기스스탄	4,188	벨로루시	150
아제르바이잔	2,600	우크라이나	51
투르크메니스탄	1,457	조지아	41
타지키스탄	418	합계	38,328

27) 동구 및 CIS 지역(14개국) 지원은 총 24,450백만원으로 3.6%를 차지함

이 중, 중점협력국인 몽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몽골

몽골은 중앙아시아 고원지대 북방에 위치한 내륙 국가로, 현재 몽골국가개발전략 2단계(2016년~2021년)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하고 있다. 비록 금액 자체는 다소 축소된 경향을 보이나, 몽골은 KOICA의 11번째 지원국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표 6〉 KOICA 1991~2018년 몽골 지원 실적 : 총 23,868만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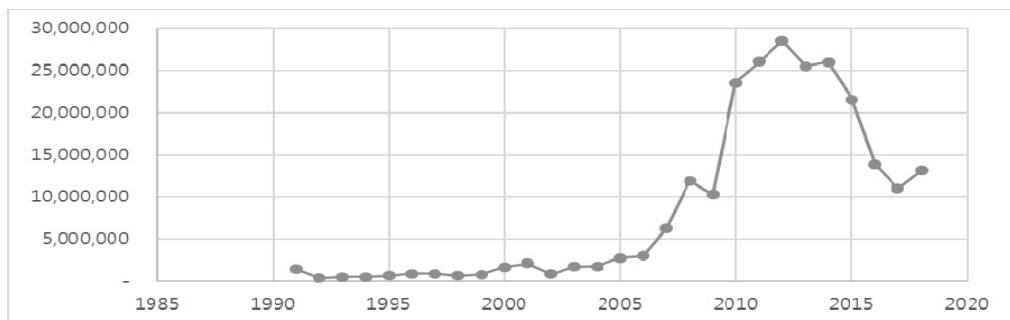
(단위 : 만달러)

연도	1991~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지원액	3,919	1,029	2,354	2,601	2,853	2,549	2,598	2,158	1,389	1,101	1,317	23,868

지원 규모는 2006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2년 최고 금액인 2,853만달러를 기록하였다. 2013년부터는 점차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8년 다시 소폭 상승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5〉 KOICA 1991~2018년 몽골 ODA 지원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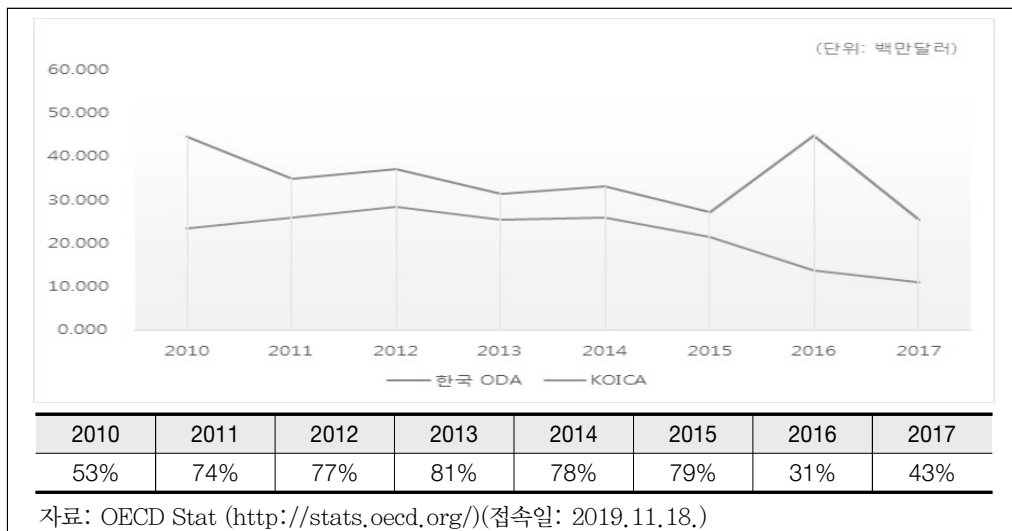
(단위: 달러)



한국의 대몽골 지원현황에서 KOICA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한국의 몽골 지원은 KOICA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2015년까지는 전체 한국 ODA 대비 약 50~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추이를 살펴보면, KOICA의 지원 규모가 2013년부터 감소세를 보인 반면 한국 전체 ODA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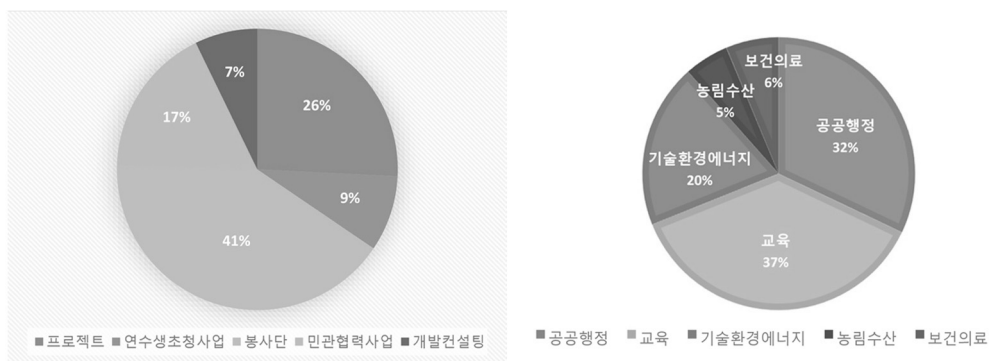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2017년 다시 급감하는 형태를 띤다. 이는 어떠한 이유일 것으로 사료되나, 특정 연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몽골 지원은 KOICA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2010~2017년도 對몽골 한국 ODA 대비 KOICA 지원 비중



2018년 무상원조 사업을 살펴보면, 지원 총액은 1,317만 달러로, 봉사단이 41%, 프로젝트 사업이 26%, 민관협력사업이 17%, 연수생 초청사업이 9%, 개발 컨설팅이 7%를 차지하였다. 분야별로는 교육분야(485만달러, 37%)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공행정(422만달러, 32%), 기술환경에너지(257만달러, 20%), 보건의료(83만달러, 6%), 농림수산(70만달러, 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 2018년 몽골 ODA 사업유형별 및 분야별 현황



또한, 2018년 對몽골 사업으로는 보건의료, 문화관광, 식수공급, 환경, 통신, 공업 분야를 찾아볼 수 있다.

〈표 8〉 2019 몽골 사업리스트

사업 유형	사업명
프로젝트	UNICEF WASH 사업
	광해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역량강화사업
	헌법재판소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개발컨설팅	한몽기술대 역량강화 3차 사업
국별연수	검찰 형사사법 역량강화
	관세 국세 정책 역량강화
	법률 집행 교도관 역량강화
	중고등교육 교과과정 기준수립
민관협력	IT산업 인력양성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사업
	여성비즈니스센터(WBC) 여성기업가 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연료 난방기 개발
	몽골 제로웨이스트 패션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캐시미어 산업 개발 사업
	몽골, 필리핀 성매개 감염병 인공지능 서비스 진단
	몽골 울란바타르시 영유아 영양급식관리 증진사업
	몽골 축산협동조합을 통한 소득증대 및 영세농가 축산 역량강화

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12번째 지원국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2016년 가장 큰 규모인 1,711만 달러 지원 이후 감소세로 접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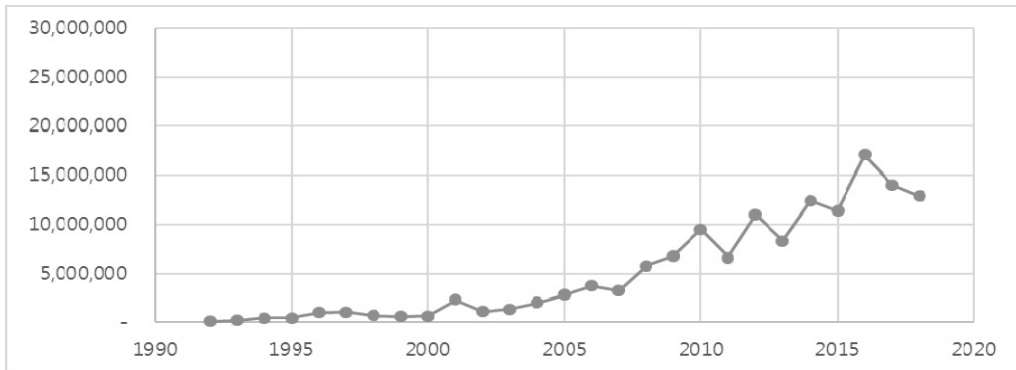
〈표 9〉 KOICA 1991~2018년 우즈베키스탄 지원 실적: 총 13,764만불 지원

(단위 : 만달러)

연도	1991~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지원액	2,762	678	949	658	1,103	831	1,243	1,137	1,711	1,403	1,289	13,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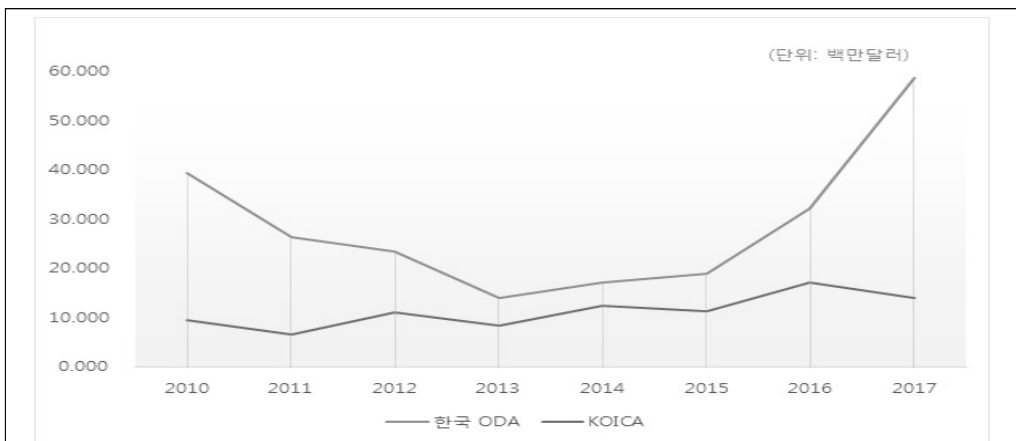
〈그림 7〉 1991~2018년 우즈베키스탄 ODA 지원 규모 추이

(단위: 달러)



우즈베키스탄 대상 한국 ODA 지원액은 201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나, 2013년부터 증가세를 시작하여 201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신북방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며, 또한 2016년 우즈베키스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경제개발 정책 수립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반면, KOICA의 지원 규모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2017년에는 오히려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급감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10〉 2010~2017년도 對우즈베키스탄 한국 ODA 대비 KOICA 지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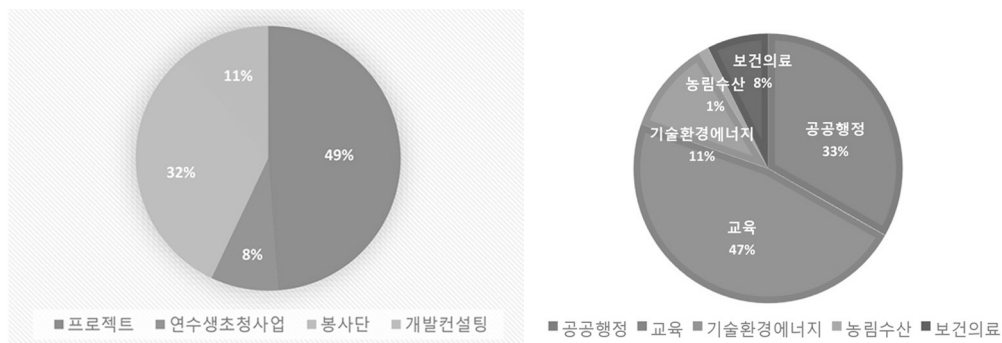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4%	25%	47%	60%	72%	60%	53%	24%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접속일: 2019.11.18.)

2018년 무상원조 사업을 살펴보면, 지원 총액은 1,290만 달러로, 프로젝트 사업이 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봉사단 32%, 그리고 개발 컨설팅사업과 연수생초청 사업은 각각 11%와 8%로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교육분야(607만달러, 47%)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공행정(429만달러, 33%), 기술환경에너지(141만달러, 11%), 보건의료(94만달러, 8%), 농림수산(17만달러, 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2018년 우즈베키스탄 ODA 사업유형별 및 분야별 현황



2018년 對우즈베키스탄 사업 분야는 몽골과 비슷하며, 보건의료, 문화관광, 식수공급, 환경, 통신, 공업 분야를 찾아볼 수 있다.

〈표 11〉 2019 우즈베키스탄 사업리스트

사업 유형	사업명
프로젝트	ICT 기반의 수자원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강화 시범사업
	사흐리사브즈시 훈련센터 설립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사업
	전염성 질병 관리역량강화사업
	타슈켄트 정보통신대학교 통합교육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보급 지원 사업
	표준청 국제동등성 확보 지원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페르가나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개발컨설팅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강화사업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
국별연수	우즈베키스탄 선임연구원 및 중간관리자를 위한 ICT 역량강화
	우즈베키스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조림 역량 강화

3)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지원 규모는 200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최고 금액인 1,63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5년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16년 다시 소폭 상승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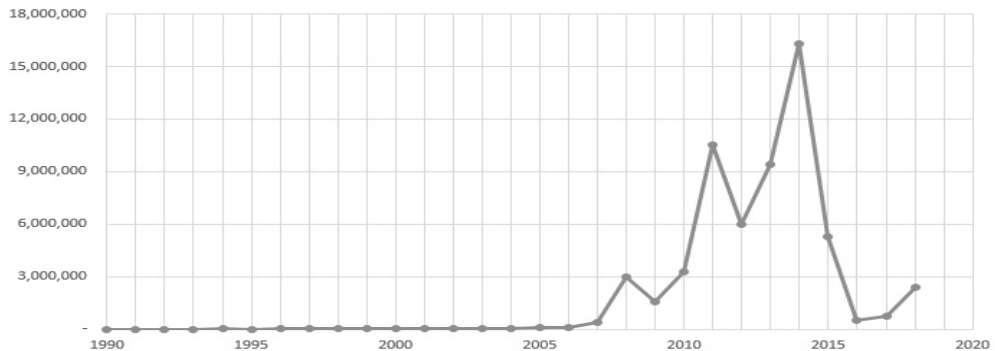
〈표 12〉 KOICA 1991~2018년 아제르바이잔 지원 실적: 총 5,967만불 지원

(단위 : 만달러)

연도	1991~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지원액	374	158	326	1,053	599	940	1,631	529	48	74	236	5,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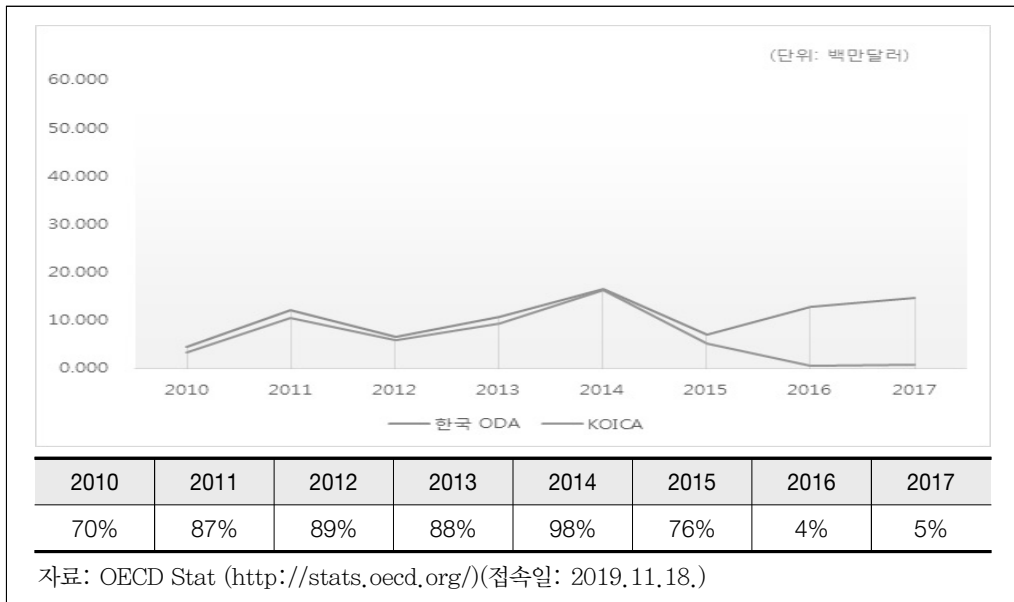
〈그림 9〉 KOICA 1991~2018년 아제르바이잔 ODA 지원 규모 추이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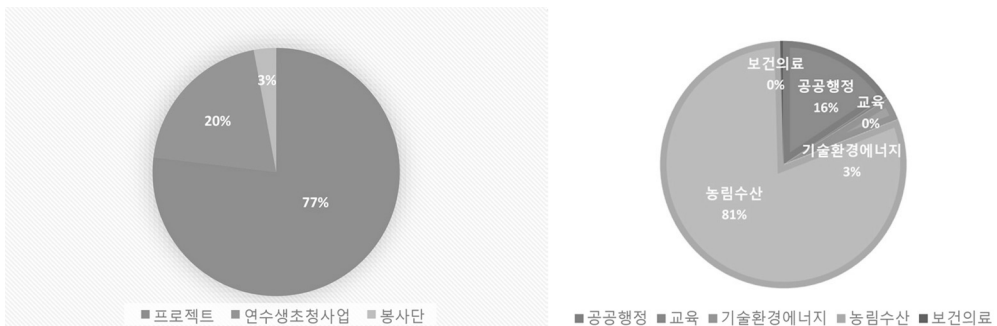
아제르바이잔 대상 ODA는 2015년까지 대부분 KOICA 지원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전체 한국 ODA 지원 금액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비해, KOICA 지원은 급감하여 비중이 4~5% 수준으로 나타난다. 아제르바이잔이 중고소득국에 해당됨에 따라 KOICA에서는 점차 지원 수준을 감축하고자 하였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2010~2017년도 對아제르바이잔 한국 ODA 대비 KOICA 지원 비중



2018년 무상원조 사업을 살펴보면, 지원 총액은 236만 달러로, 프로젝트 사업이 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연수생초청사업이 20%를 차지한다. 봉사단은 3%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농림수산(190만달러, 81%)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공행정(37만달러, 16%), 기술환경에너지(7만달러, 3%), 보건의료(0.96만달러, 0%), 교육(0.93만달러, 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2018년 아제르바이잔 ODA 사업유형별 및 분야별 지원현황



2018년 對아제르바이잔 사업 분야로는 교육 및 농림수산(물 공급) 분야가 있다.

〈표 14〉 2019 아제르바이잔 사업리스트

사업 유형	사업명
프로젝트	IOM 물공급시스템 (카흐리즈) 구축 지원사업
	교사역량강화 및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코자밴드지역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
국별연수	공공서비스 및 사회혁신 역량강화
	수의제조물 및 식품생산 품질관리역량강화
	식품 조달 및 공급 시스템 개발

Ⅲ. 신북방정책의 개념 및 현황

1. 신북방정책의 의미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계하고 실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5대 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5대 목표 중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1.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3대 국정전략을 포함하고 있다.²⁸⁾ 이 중 2와 3에 해당하는 국정과제는 90, 98, 100이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신북방경제 협력 활성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은 동북아 지역 내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하는 외교 정책 기조로, ‘평화의 축’으로서 평화·안보협력을 위한 동북아 평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번영의 축’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제고하고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대외정책이다. 일대일로·신동방정책 등 역내 국가들의 유라시아 통합노력에 대응하며 북방지역을 새로운 ‘번영의 축’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신북방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2017년 12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북방경제협력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최근 러시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의 역내 경제 통합이 가속화²⁹⁾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북-미,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동북아 평화 기반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조를 공고히 하고, 유라시아 경제 통합 흐름과 둔화하는 중국 성장에 대응하여 북방경제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한다.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함으로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28) 별첨 1

29) 러시아 신동방정책 EAEU 출범, 몽골 초원의 길: 몽-중-러 경제회랑, 중국 일대일로: 해상 및 육상실크로드, 카자흐스탄 뉴를리줄 유라시아 교통허브 구축

물류 사업, 철도, 전력망 등)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한-EAEU FTA 추진 및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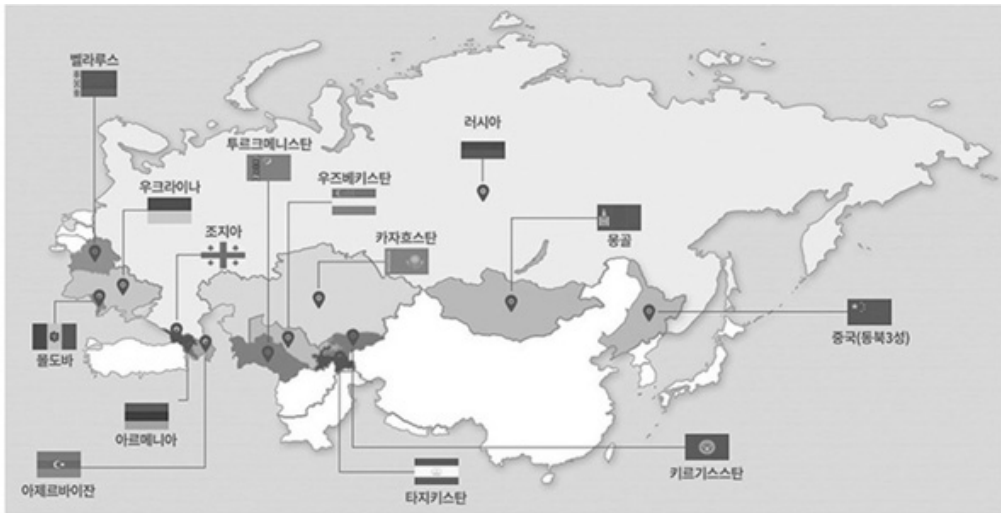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도 북방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오고 있었다. 다만,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기존 성과 및 한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G2 정세 변화 등의 세계 경제 갈등 심화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다변화 및 신성장공간 창출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북방 경제권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갖춘 새로운 시장임이 틀림없다. 더욱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협력하며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며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시점에서, 신북방정책은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발표된 정책으로 과거와는 달리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전히 남북관계의 긴장에 따른 추진 한계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북방지역의 정치경제 환경 속에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3년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교역 규모를 현재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북방경제협력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협력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의 추진 방향을 다시금 강조하며 도로·철도·공항, 플랜트,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급변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 다각화, 수입대체 산업화 수요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하며 북방지역으로의 정치경제적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이다. 여기에는 북방경제권과의 관계를 경제 문화 외교 등의 다방면에서 제고함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북방경제협력 위원회를 설립함으로 중점 전략 수립 및 다양한 참여자 간의 이견 조율이 가능하도록 하며, 민간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과, 이를 통해 개별 사업의 병렬적 추진이 아닌 통합적 패키지로 접근을 시도하며 주요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북방정책이 새롭게 제시하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신북방대상국은 유라시아대륙의 북부 및 중·동부에 위치한 신흥경제권 국가들을 가리킨다. 신북방정책이 명시한 신북방국가들은 총 14개국³⁰⁾으로 동슬라브지역(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30) OECD DAC 수원국으로는 몰도바, 몽골,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중저소득국(LMIC)에 속하며,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중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고소득국(UMIC)에 속함

중앙아시아지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코카서스지역(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동유럽지역(몰도바), 아시아지역(몽골, 중국(동북 3성))으로 나뉜다. 이 지역은 2017년 기준 세계 GDP 2.5%를 차지하고 인구는 세계의 3.4%인 약 2.9억 명에 달한다.³¹⁾

〈그림 11〉 신북방대상국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북방정책은 크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경제 상황 및 특화분야를 고려한 협력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가장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부권역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9개 다리(9-BRIDGE)’³²⁾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망 및 운송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부권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거점지역으로 인프라 구축 및 산업 다각화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자원개발, 농업 및 정보통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확대를 통해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확대를 촉진하고자 하며, 경제 및 사회 인프라가 미흡한 분야에서는

31)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8c)

32) 가스: 러시아 LNG 추가 도입을 통한 가스 도입선 다변화 및 향후 남북러 가스관 연결
 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운송 활성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향후 TSR과 남북철도(TKR) 연결
 항만: 자루비노항 등 극동지역 항만 현대화 및 건설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한-중-몽-일-러 간 전력을 연계·공유하는 광역전력망인 동북아수퍼그리드 구축
 북극항로: 북극항로를 새로운 물류 루트로 개척하여, 북극항로 상업이용 활성화 및 북극해 시장 선도
 조선: 극지 이동 쇄빙 LNG운반선 건조 및 조선소 건설
 농업: 종자 개발, 재배기술 연구 등 한-러 농업협력 확대
 수산: 연해주 수산물 복합단지 조성 및 어업 쿼터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 확보
 일자리(산업단지): 남북러 협력을 통한 연해주 공단 조성

국제개발협력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서부권역은 고부가가치산업 기술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기관 및 기업을 통한 산업 기술협력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

〈표 15〉 지역별 주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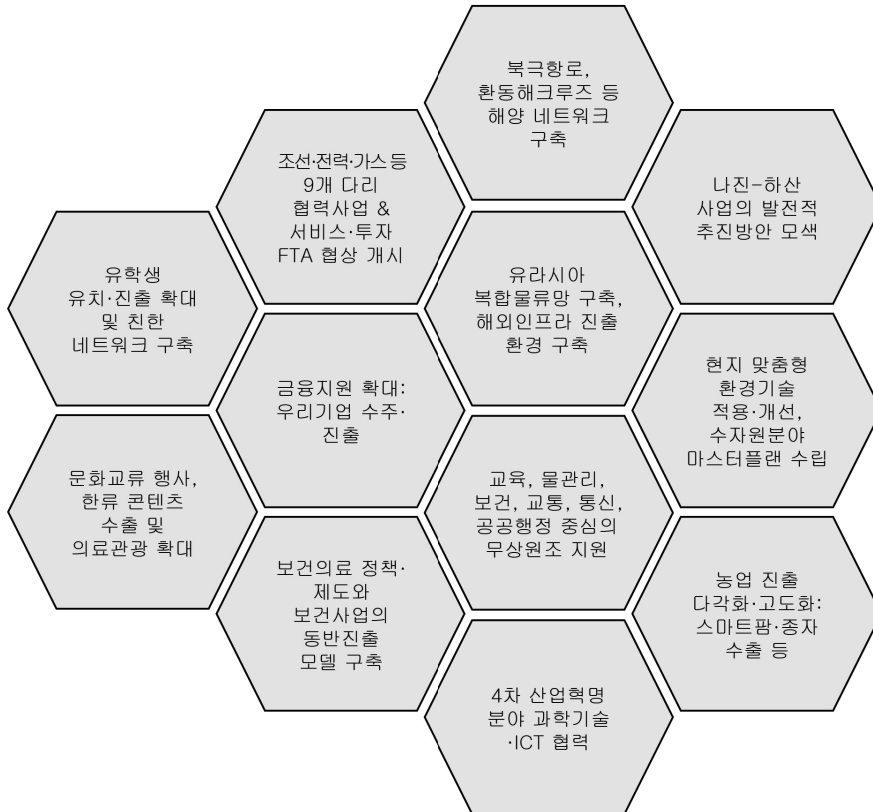
지역		주요전략
동부 권역	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 3성	• 경험강화를 통한 한-러 간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 한-러 협력을 통해 극동개발 협력사업 추진 - 일대일로 연계사업 및 동북 3성에 대해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 - 한-러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남-북-러 협력사업 단계적 추진
중부 권역	몽골 중앙아시아 5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코카서스 3국(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 자원개발, 인프라 분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 교류 협력 확대 - 성장잠재력이 큰 자원개발, 인프라 분야 협력 지속 강화 - 제조업, 농업 및 정보 통신 등 강점분야로 협력 확대 - 정부 간 협의회 등을 활용, 민간지원 및 정부 협력 강화
서부 권역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 기술협력 강화 - 대학,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 연구기반을 활용한 기술협력 및 공동투자 - 한러 과학기술협력 센터(모스크바)를 협력거점 기관으로 조성 -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 이노프럼 국제박람회 등 적극 활용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7) 참고하여 재구성

동부권역으로는 나인브릿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교육,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는 만큼, 상생변영 플랫폼 구축 및 인적 문화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여 향후 5년간 연평균 5.7% 교류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2월 나인브릿지 행동계획 서명 및 한-러 혁신센터 출범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선(쇄빙LNG 운반선 건조) 및 의료(한국형 프리미엄 전문 클리닉 개설 등)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마련되고 있다. 동부권역의 협력사업은 신뢰 관계 강화 등을 통해 북한과의 협력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향후 북한과의 삼각 협력으로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으로는 산업 다각화 및 현대화, 사회 인프라 개발, 인적자원 및 중소기업 육성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을 공유하고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서부권역으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산업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산업기술협력, 스타트업

벤처 등 기술기반 기업 간 교류 활성화 등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들의 19년도 세부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큰 틀에서 기술을 바탕으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2〉 중앙행정기관 '19년도 신북방정책 추진방향 재구성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9) 참고 저자 작성

북방경제권은 지리적으로 접근에 한계가 있으며, 언어장벽,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서방의 대러 제재 등의 위험요인이 많아 그동안 관계 구축 및 개선에도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북방정책은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역내 장기적인 평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는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인바, 강대국 간의 긴장 관계를 우리나라에 기회로

만드는 전략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 밖에도 러시아, 중국, EU 등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증대 및 적극적인 경제협력은 역내 정치 외교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도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북극항로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필적하는 연결 루트로, 사업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직 주목받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겠으나,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 및 향후 시장 확대 차원에서 계속해서 주시해야 하는 분야임에 틀림없다. 최근 급속한 기업 환경 개선추세와 북방지역 국가의 수입대체 산업 육성 정책은 한국에 시장 확대 기회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차별화된 접근으로 초국경·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하고, 시장 다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에너지·물류망 구축 등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신북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OD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방지역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으로 중저소득국 또는 중고소득국에 속하며, 개발협력 및 민간주도의 비즈니스 협력사업 등이 가능하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정치 경제적 변화의 양상을 감안한다면 ICT, 거버넌스, 무역 원활화, 환경 분야 등에서의 협력이 우선시 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신북방정책에서 언급하는 ODA를 활용한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개선 및 우리 기업진출 방안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언급되어왔던 것에 비하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ODA는 여전히 그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지원이 KOICA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중국의 일대일로도 러시아의 북극항로 개발도 모두 정치적인 경제협력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무역·물류 루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업에 우리나라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 강대국으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연결 루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구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ODA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관계 개선 및 시장 발굴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부처별 사업과 KOICA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ODA 분절화 문제에 상당 부분 해결이 될 수 있을뿐더러, 북방지역으로의 진출에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신북방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1)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 기반 구축, 2)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3)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4) 인적·문화교류 확대를 상호 이해증진이라는 4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목표 달성을 위한 16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부처별 63개 세부과제³³⁾를 추진하고 있다.

〈표 16〉 신북방정책 4대 목표와 16대 과제

목표 1.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 기반 구축		
①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	북·중·러 소다자 협력을 통해 초국경 지역에 경제협력을 추진: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신의주 특구개발, 나진항 공동개발, GTI (광역두만강 개발계획) 국제기구화
②	환동해 관광 활성화	북한을 기항하는 크루즈 항로 개발과 두만강 국제관광특구 개발하여 경제 활성화 기여
목표 2.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③	유라시아 복합 물류망 구축	해운·철도 복합운송 여건 개선과 항공노선 확충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다양한 물류 수요 충족
④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한·중·일 및 남·북·러 전력망 연결하여 안정적 전력공급
⑤	한-러 천연가스 협력	러시아 천연가스 사업(PNG, LNG)에 참여하여 가스 도입 방식 다변화 추진
⑥	북극항로 진출로 해운·조선 등 신시장 개척	아시아-유럽을 잇는 북극항로 운송 이용 활성화와 북극해 항만개발에 4차 산업기술 적용. 한-러, 한·중-러 협력
목표 3.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⑦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러시아 원천기술과 한국의 ICP·응용기술 결합한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하는 R&D 사업 및 창업생태계 조성
⑧	인프라·환경 협력 확대 (수자원 협력 및 환경협력)	한국 ICT·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첨단 인프라 건설 및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로 수주 확대 - 협력국 다변화 및 사업 다각화 추진, 환경협력 강화
⑨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협력 확대 - 러시아와 지능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중앙아시아와 ICT 협력, 유라시아, 중앙아, 몽골지역 내 문제 해결, 러시아와 중앙아의 제조업 및 수입대체 산업 육성 기회 활용, 몽골과 에너지 협력

33) 2019년 6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추진 과제를 56개에서 63개로 확대함(8개 신설, 1개 삭제, 63개 세부과제 리스트는 대외비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56개 세부과제 리스트는 제3차 회의의 안건문서에 별첨되어 있음).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 성과 및 후속 조치(중앙아: 중소기업 진출 지원, 전자정부 협력, 한국어 교육, 유아 교육 등), 신북방정책 수립 후 국내외 여건 변화(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 조선·해양플랜트 협력 확대) 등을 반영함.

⑩	북방진출 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	민간 투자위험 완화와 금융조달 용이성 제고를 통해 한국기업의 북방진출 유인
⑪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 협력 확대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을 확산하고 ICT 기반 의료기술, 제약, 의료기기 시장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⑫	농수산분야 진출 활성화	(농업)극동지역 농업기반을 강화하고 러시아 서부, 중앙아시아로 시설원에 진출 및 종자 보급 추진 (수산)러시아 수산물류 가공복합단지 조성 사업추진
목표 4.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⑬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문화행사 및 한국어 보급 확대하고 한류 콘텐츠 진출 전략 마련
⑭	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 및 인력 양성	유학생 유치, 청년 북방지역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학술교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북방경제권 협력 지속을 위한 지역전문가 육성
〈추진체계 구축〉		
⑮	위원회 중심의 협력 체계 구축	정부 민간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⑯	다각적인 외교협력 기반 조성	북방위 중심 상시 협력체계 구축, 한·중·러 등 다자차원 협력 확대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8c)를 바탕으로 재구성

신북방정책은 경제·사회·인프라 개발 지원이 필요한 북방국가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다분야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신북방정책의 거점으로 활용하며 정상순방 후속 조치로 우즈베키스탄 전자무역 플랫폼 및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사업 등 산업부와 보건부 중심으로 사업 발굴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부와 KIAT를 중심으로 산업·에너지 ODA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산업·에너지 ODA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신북방정책에서 ODA 사업을 추진하는 과제로는 세부과제 ‘8. 인프라·환경 협력 확대’, ‘9.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11번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협력 확대’, 12번 ‘농수산분야 진출 활성화’, 13번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16번 ‘다각적인 외교협력 기반 조성’에서 외교부, 기재부를 통해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원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한 산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신북방정책의 ‘8. 인프라·환경협력 확대’는 기존의 유라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 중심의 인프라 사업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부처들은 ICT 및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등의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하여 정부는 수자원 인프라와 환경 인프라 협력 ODA를 환경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9.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핵심 분야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러시아와는 빅데이터, AI, 5G 등의 신기술 공동개발 등의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유라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은 ICT 기반 조성과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협력에 주력하고자 한다. 관련 ODA 사업으로 한국형 전자무역플랫폼 구축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작되어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등 주변 국가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ICT 정보화 컨설팅을 통해 한국기업의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및 수입대체 산업 활성화 노력에 맞추어 한국 기계류 수출을 촉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ODA 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와 농기계 R&D센터 조성 사업이 있으며, 이외에도 에너지 협력으로 몽골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ODA 사업을 시행하며 한국 기업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신북방정책의 ‘11.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협력 확대’는 기존의 의료진 연수 중심 및 의료센터 설립 등의 유무상지원 형태를 넘어 ICT 기반 의료기술과 제약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기업 시장진출을 도모한다. 추진방안은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 확산’, ‘ICT 의료기술’, ‘제약 의료기기’의 세 가지 방안으로 구성되며, ODA 사업은 주로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 확산(과제11-1)’을 위해 시행된다.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비한 국가들에 한국 보건의료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보건의료시스템 구축하고자 함이다. 2017년 10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시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높은 수요를 전달한바,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여러 국가로 지원을 확대해왔으며,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몽골 국립 진단치료센터 핵의학실 등 협력국의 병원 건립과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의료인 대상 초청 연수와 해외 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보건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2. 농수산분야 진출 활성화’는 시설원에 진출 및 종자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러시아 서부, 중앙아로 분야를 다변화하여 진출하고자 한다. 관련 ODA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 기술개발사업(KOPIA;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이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맞춤형 농업기술지원과 자원 공동개발을 통하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신북방대상국 중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에 농업기술개발센터를 설치하여 농정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2019년 KOPIA 우즈베키스탄센터에 최초로 농촌지도센터를 신설하여 한국의 농촌 지도사업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기술보급을 담당할 농촌 지도조직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한류열풍은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며 북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및 한국어 한국문화 교류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13.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아래, ‘정부 간 협력 및 문화행사 확대’, ‘문화·체육·관광 ODA 활용’, ‘콘텐츠 수출’을 통해 북방지역에 특화된 문화교류 사업을 확대하며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16. 다각적인 외교협력 기반 조성’ 역시 ODA 사업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과제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및 외교부 중심으로 양·다자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 구축 및 북방경제권 ODA 사업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 외교부 및 기재부를 중심으로 ODA 및 지식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ICA는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무상원조사업을 맡고 있으며,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신북방국가에게 ODA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몽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은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이자 KOICA 사무소가 설치된 국가로 1990년대부터 한국 ODA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신북방정책에서 ODA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무상원조기관인 KOICA와의 연계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북방정책 내 KOICA는 CPS상 각 중점협력 분야에 따라 진행 중인 양자 무상원조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만 언급되어 있다.³⁴⁾ 신북방 정책은 정부 부처 중심의 정책으로 각 부처에서 신북방경제권과의 협력이라는 정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분야별 진출 전략에 ODA를 연결 고리로 활용하는 의미가 큰 만큼, ODA 자체가 주된 목적은 아닌 셈이다. 무상원조 대표기관으로써 추구하는 ODA 방향성과는 그 목적과 지향점이 다른 만큼, 연계성이 다소 결여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겠으나, 신북방전략 내 전체 ODA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KOICA의 역할이 미미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OICA 역시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ODA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바, 향후 해당 지역 지원 전략 수립에 있어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4)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9)

IV. 신북방정책에 따른 KOICA ODA전략 연계 방향성

신북방정책에서의 협력은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방경제 협력이란 정치 외교적 목적을 가지는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인 셈이다. 무상원조 또한 국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이행을 추구하고 있으니, 경제적인 관점에서 방향성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잠재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북방지역에 소통, 인적교류,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정치·외교적 관계 확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향성에 부응하는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한국의 위상 및 개발 효과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방경제권은 서비스 교육이 상품교역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무역·물류 인프라는 경제성장의 기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낙후된 인프라는 경제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 이에 신북방정책에서 추구하는 협력은 인프라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많은 편이다. 다만, 이러한 인프라 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들로 KOICA의 무상원조와는 성격이 다소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연계 가능한 관련 사업들을 통해 패키지 형태로 참여 가능한 만큼, 신북방정책의 방향성에 부응하는 전략 수립 및 사업 발굴도 가능할 것이다.

1. KOICA 국별 무상원조 사업 전략

2019년 KOICA는 기관 최상위 사업추진전략으로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국제사회, 우리 정부 정책(CPS 등) 및 수원국 우선순위와 현재 진행 중인 국별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국가별로 중점 추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KOICA는 정부 ODA 정책, 협력국 개발정책, 국제사회의 정책을 바탕으로 수립된 정부의 국가협력전략 (CPS)를 기반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해왔다. 무상원조 지원에 있어 다수의 정책과 전략이 있는 가운데, CP를 수립함으로써 국가별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전략과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출물(output) 중심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이다. 나아가 중장기 지원계획 등을 통해

예측 가능성, 책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 수단 간의 결합을 통해 추진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며, 협력국과 국내외 주요 파트너와의 CP 공유를 통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유기적 연계 및 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

〈표 17〉 KOICA CP 5대 수립방향

• 전략 기반 사업추진(Policy-Aligned) - 수원국 개발전략, 국제사회 및 우리정부 개발·외교·경제정책 등 유관 정책 및 전략에 기반한 프로그램 도출 및 연계사업 발굴
• 핵심성과 중심 개발(Area(sector, issue)-Focused) - 중장기 관점에서 구체적인 핵심(Focused) 분야/이슈/지역 프로그램 수립 및 계량 Outcome 성과 지표 관리(SDGs 성과지표 활용)
• 예측가능성 및 책무성 제고(Predictable and Accountable) - 협력 국가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 프로그램 및 신규사업 발굴 규모 제시
• 사업유형의 통합적 활용(Modality-Integrated) - 다양한 사업 형태(Modality)와 활동을 활용한 통합적 프로그램 추진
• 포용성 강화(Partner-Inclusive) -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 기관과의 실효성 있는 협업 및 사업연계 방안 수립

CP는 총 44개국 내 9개 분야 139건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주요 정책 외에도 협력국 및 국제사회의 정책도 반영하고자 함에, CP는 국내외의 주요 파트너와 공유함으로써 신규 국별협력 사업 발굴 및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이중 신북방대상국가는 총 4개국 1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점협력국인 몽골(4), 우즈베키스탄(3), 아제르바이잔(3)과 비중점협력국인 키르기스스탄(3)이 있다.

KOICA 사업을 포함하여 정부의 북방지역 기존 ODA사업리스트를 살펴보면, 환경·보건·교육·과학기술·행정·농림수산·기후·관세·산업·문화·산림 등 다방면에서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KOICA의 사업과 달리, 신북방정책에서는 북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 ODA 사업도 해당이 되는 것이다. 협력 대상 국가들이 중고소득국임을 감안하여 ODA 사업이 교두보 역할을 하며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 4개국을 중심으로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사사업이 있을 경우, 패키지 형식으로 국가별 사업 파이프라인 구축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주요국 지원 방향성 제언

1) 몽골

한국과 몽골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며, 양국의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2011년 수립)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자 한다. 몽골은 다양한 정책과 조치들을 통해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몽골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몽골 정부는 농업분야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축산업 가공을 통해 육류, 우유, 가죽, 울 캐시미어 등의 해외수출을 활성화하고자 한다.³⁵⁾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신북방 지역의 열악한 물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공동운송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몽골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를 포함하여, 인천~알마티·타슈켄트·울란바토르 등 운송경로를 이용하는 다수 수출업체와 전문 물류업체 간 합작으로 지역별 공동 물류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수산물의 유통망 구축에 있어 핵심사안 중 하나로 냉장·냉동 유통망을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신북방지역의 냉장·냉동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여 내륙 콜드체인을 강화하고자 한다.³⁶⁾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신북방정책 내 對몽골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몽골이 언급된 부분은 의료분야와 문화분야이며,³⁷⁾ 이 외에는 KOICA 사업이 언급되는 정도이다. 세부 사업리스트 기준으로는 대기 개선, 과학기술 협력 및 에너지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진행여부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몽골은 신북방정책 내 중부권역으로 분류되어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함께 자원개발, 인프라 분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할 목표를 갖고 있으며, 철도 및 물류체인 등의 교통분야에서의 협력이 우선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동시에 러시아 극동 및 중국 동북 3성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역할로 동부권역의 9개 다리 전략의 사업들과도 상당한 관련이 많은 지역으로, 에너지(동북아 수퍼그리드) 및 철도 사업으로도 협력 가능성이 높다.³⁸⁾

3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몽골 신경제 정책방향과 한몽 경제협력” 전문가회의 결과(2018. 09.11) 참고

36) 이명철(2019)

37)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4차 회의 문서 내 16대 중점 과제 관련 19년도 예산 현황 근거로 저자 추정

38) EDCF는 몽골의 친환경 주택 건설, 저탄소 대중교통수단 보급, 노후난방 개선사업 등 대기오염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에너지 협력사업으로 동북아 수퍼그리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의 몽골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이유미(2019a)

한편 KOICA는 몽골지원계획(CP)으로 ‘물류 인프라 교통안전 개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복원력 강화’, ‘포용적 농목축업 개발 및 농식품 안전성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향상’의 총 4개의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4개의 프로그램 중 물류 인프라 교통안전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향상은 CPS 및 KOICA 중기전략상의 공공행정과 교통 분야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포용적 농목축업 개발 및 농식품 안전성 강화는 KOICA 농촌개발 중기전략과 연계된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은 다소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물·보건 분야, 기후변화 분야 등이 해당될 수도 있다.

〈표 18〉 몽골 국가협력전략 중점협력 분야별 지원방향 및 KOICA 지원방향

CPS	KOICA
교육	교육 중기전략
고등교육 및 중·고등기술교육 환경 개선, 교육기회의 공평한 접근성 증대	양질의 교육을 통한 포용적 발전: 개도국 교육시스템 강화 및 교육 주체 참여 제고를 통해 모든 인간의 교육권 향상에 기여
물관리 및 보건위생	보건 중기전략, 물 중기전략
- 비전염성 질병 및 중독성 물질의 통제 및 예방 확대 - 깨끗한 식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 관리 역량 강화	- 모든 인간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보장: 모든 사람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에 기여 -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의 물: 안정적인 물 공급, 물 이용 효율성 증대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경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복원력 확보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공공행정	공공행정 중기전략
- 전자정부 확대를 통한 공공행정 투명성, 효율성 제고 - 공무원 채용 및 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효과성, 책임성 포용성을 갖춘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소에 기여
교통	교통 중기전략
운송, 물류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역량 강화	모두를 위한 경제사회발전: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포용적 성장(경제사회발전)에 기여

2019년도 진행 중인 국별 사업을 살펴보면 기술환경에너지, 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분야에서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 교육 분야의 개발 컨설팅사업과 농림수산, 교육, 보건의료, 기술환경 에너지, 공공행정 등의 민관협력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북방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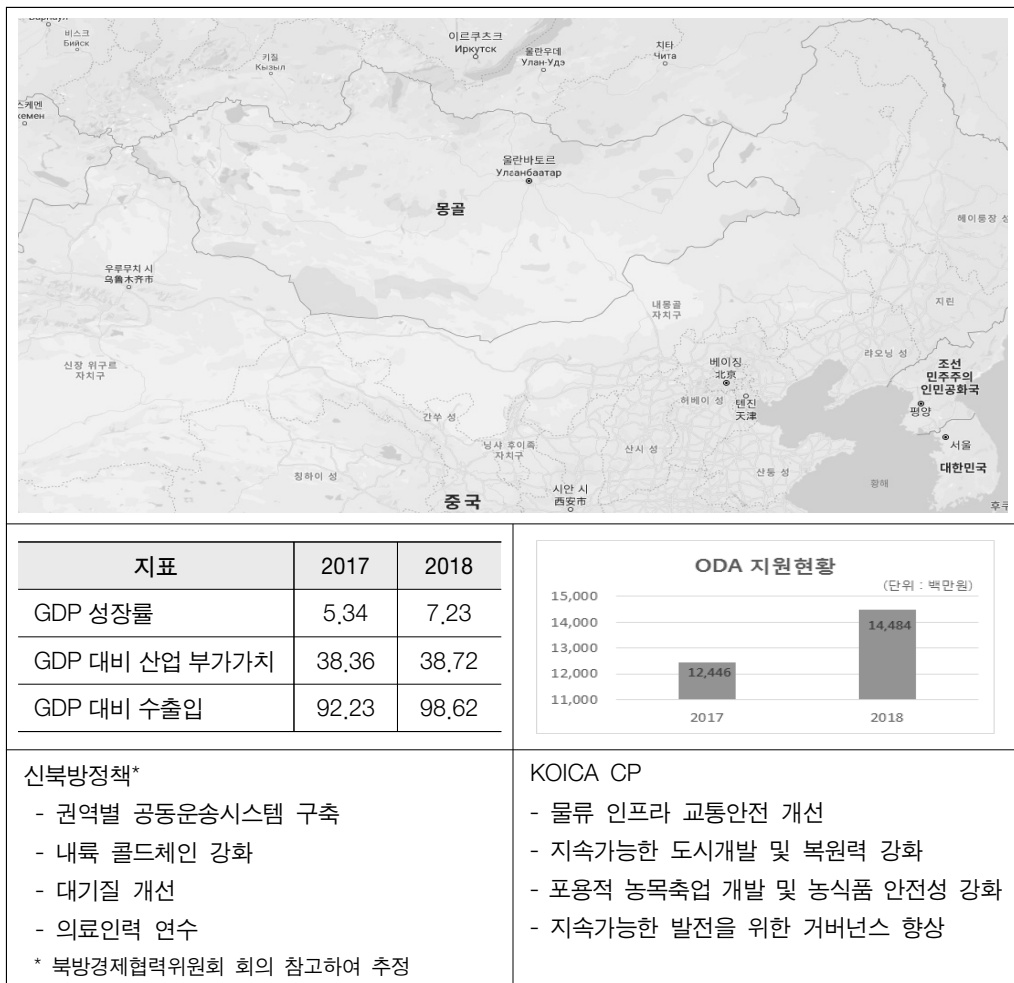
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 및 문화 분야의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업 분야로는 물류 인프라 사업이 있다. KOICA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함께 살펴보면 <표 19>와 같다. 또한 표에는 언급되지 않은 예비 및 후보 사업으로 철도교통 사업 및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등 관련성이 있는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다.

〈표 19〉 몽골 2019~2022년 진행사업(국별·개발 컨설팅·민관협력 사업, 예비 및 후보사업 제외)

사업명	CRS Code	CPS 분야	KOICA 분야	CP	신북방정책 연계가능성
몽골 광해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41010	공공행정	기술환경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향상	
몽골 헌법재판소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	15130	공공행정	공공행정		
몽골 UNICEF 지역사회기반 기후변화 대응 WASH 사업	14030	보건위생	보건의료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복원력 강화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 대학 역량강화사업	11420	교육	교육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향상	v
몽골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시스템 개선사업	11330	교육	교육		
몽골 축산협동조합을 통한 소득증대 및 영세농가 축산 역량 강화	31120		농림수산	포용적 농목축업 개발 및 농식품 안전성 강화	v
몽골 특수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11220	교육	교육		
몽골 IT산업 인력 양성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사업	11430	교육	교육		v
몽골 울란바토르시 영유아 영양급식 관리 증진사업	12240	보건위생	보건의료		
제로웨이스트 패션 기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캐시미어 산업 개발 사업	43040		농림수산	포용적 농목축업 개발 및 농식품 안전성 강화	v
몽골 기후변화 피해지역 주민 생산자 네트워크 구축 및 유실수 가공을 통한 주민 자립 사업	43032		기술환경 에너지		v
몽골올레 생태관광 플랫폼 활용, 소외 계층 경제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 사업	15110	공공행정	공공행정		v
몽골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 연료 난방기 개발	23183		기술환경 에너지		v
몽골 자동차 재활용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 재활용 시범사업	43040		농림수산		

신북방정책 내 ODA 사업으로 언급되는 보건의료 분야 사업은 대부분 병원 건립 또는 병원 컨설팅 사업으로 KOICA에서 하는 보건의료 분야 사업은 식수 및 위생 서비스 강화 정책 개발 또는 유치원 영양 급식 관리로 관계부처 사업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개발 관련 사업, 나아가 물류, 철도교통 인프라 사업 등은 향후 관련 부처 사업들과 협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기술 및 인프라 사업의 경우, 규모가 상당하여 무상원조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관계부처의 사업과 패키지 형태로 관련 정책 정비 및 수립, 역량강화 및 연수 사업 등을 무상원조 사업으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몽골 정부의 농림축산업 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가치사슬 내에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한국의 특성을 살린 방향성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0〉 주요 몽골 현황



2)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중앙아시아 5개국)

신북방정책 내 ODA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지역이자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지역이 중앙아시아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시장 개방 및 역내 경제 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와 코카서스 및 유럽으로 연결하는 물류거점이자 광물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그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이 크며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으로, 최근에 많은 언급이 되는 중점협력국이다. 4월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중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 우즈베키스탄과 유라시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신실크로드 시대를 열기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양국 간의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가스전 개발, 발전소 건설 등 양국 협력 사례를 계속 발굴하면서 ICT, 5G, 첨단과학 분야 및 의료,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다양한 기술협력 분야를 언급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56개 세부과제리스트³⁹⁾ 내 직접 우즈베키스탄이 언급되는 사업은 상당수가 있으며, 분야도 스마트시티 협력, 상수관 및 통합물관리 M/P 수립, ICT 협력, 한국형 전자 무역플랫폼 구축, 농기계 R&D 센터 조성, 섬유테크노파크 조성, 온-오프라인 유통망 지원 체계 구축, 의료 해외 진출 지원, 북방지역 물류 기반 구축 및 농식품 시장 개척, 관광박람회, 맞춤형 콘텐츠 진출 전략 연구, 중앙아 대학생 초청 연수 선발 및 연수, 인문학술 공동연구, 유라시아 아카데미 신설 및 운영 등 다양하다. 이를 중앙아시아 순방 3개국으로 확대하면 더욱 많은 협력사업의 제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약 120억불⁴⁰⁾에 상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ICA는 우즈베키스탄지원계획(CP)으로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포용적 직업기술교육’,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효과적인 질병 예방·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적 역량강화’,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의 총 3개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3개의 프로그램은 각각 교육, 보건·물, 공공행정 CPS 및 KOICA 중기전략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9) 2019년 6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56개 세부과제가 63개로 확대되었으나, 대외비로 기존 56개 세부과제 리스트 기준으로 검토

40) 성원용(2019)

〈표 21〉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 중점협력 분야별 지원방향 및 KOICA 지원방향

CPS	KOICA
교육	교육 중기전략
• 직업교육훈련 질적 향상 • 교육 정보화 지원	• 양질의 교육을 통한 포용적 발전: 개도국 교육시스템 강화 및 교육 주체 참여 제고를 통해 모든 인간의 교육권 향상에 기여
물관리 및 보건위생	보건 중기전략, 물 중기전략
• 수자원 관리 역량 강화 • 영유아에 대한 보건지원 확대 • 전염병 진단 및 치료 시스템 구축	• 모든 인간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보장: 모든 사람이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 •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의 물: 안정적인 물 공급, 물 이용 효율성 증대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경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복원력 확보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공공행정	공공행정 중기전략
• 전자정부 구축 • 공공부문 역량 강화	•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 :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효과성, 책임성 포용성을 갖춘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소에 기여

2019년도 진행 중인 국별 사업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프로젝트 사업과 보건의료 및 공공행정 분야의 개발 컨설팅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북방정책에서는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섬유테크노파크 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플랜트 분야 진출 외에도 도로·철도·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 분야로 그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고자 하며,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적인 면화 생산국으로 이미 2005년 섬유 관련 기술 교류를 이어오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농기계 R&D 센터, 전자무역플랫폼 구축 등의 산업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등의 인프라 관련 및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ICT 관련 협력이 논의될 예정으로 나타난다. KOICA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함께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또한 표에는 언급되지 않은 예비 및 후보 사업으로 기술기반 창업촉진센터 역량강화사업, 토지정보데이터, 전염병 전산시스템 및 검역서비스 관련 사업 등 관련성이 있는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다.

〈표 22〉 우즈베키스탄 2019~2021년 진행사업(국별·개발 컨설팅사업, 예비 및 후보사업 제외)

사업명	CRS Code	CPS 분야	KOICA 분야	CP	신북방정책 연계가능성
우즈베키스탄 전염성 질병 관리역량 강화사업	12250	보건위생	보건의료		v
우즈베키스탄 사흐리사브즈시 훈련 센터 설립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사업	11330	교육	교육		v
우즈베키스탄 표준청 국제동등성 확보 지원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5110	공공행정	공공행정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v
우즈베키스탄 ICT 기반의 수자원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 강화 시범사업	14010		기술환경 에너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11330	교육	교육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포용적 직업기술 교육	v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정보통신대학교 통합교육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보급 지원 사업	11110	교육	교육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	12181	보건위생	보건의료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효과적인 질병 예방·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적 역량 강화	v
우즈베키스탄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강화사업	15110	공공행정	공공행정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우즈베키스탄은 플랜트, 발전소, 병원, 교통·인프라, 교육시설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한 바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 바이다. 중앙아시아의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자동차, 섬유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많은 분야에 진출해 있다. 협력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과 의지가 맞아 떨어진 가운데,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업들은 ODA사업이라기 보다는 시장성이 높은 경제협력 사업에 더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ODA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양한 첨단과학기술 사업과 함께 관련 가치사슬 내에 있는 지원 가능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섬유테크노파크 건립 사업도 ODA로 완성 되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닌, 이를 바탕으로 섬유 가치사슬을 수립해 가는 것은 또 다른 ODA 사업 내지 관련 경제협력 사업이 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KOICA 사업은 신북방정책과의 직접적인 연계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물론 현재의 사업들을 기준으로 고려한다면, 신북방정책이 언급되기 이전에 시작된 사업들로 당연히 연계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지 않은 사업들이다. 또한 2020년 계획 중인 사업들 또한 CPS를 고려하여 KOICA의 사업전략이 수립되고는 있으나, 신북방정책의 구체적인 사업전략의 경우 아직은 명확한 추진이 부재한바, KOICA의 사업 역시 연계 가능성에 대해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신북방정책 내 보건의료사업의 경우 의료센터 건립과 함께 인력 양성의 측면에서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염병 전산 보고시스템 등의 관리 역량 강화도 의료시스템이라는 큰 틀에서 정상순방 후속 조치로 언급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사업 발굴과 그 방향성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후보 사업으로 논의 중인 토지정보데이터 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사업의 경우도 도로·철도·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 분야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북방정책 하에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와는 별개로, ODA사업에서는 다소 미온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상황과 현 정부의 수요 방향성 등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순수 ODA 성격의 협력사업보다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은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KOICA 지원기준 중동·중앙아시아 두 번째 지원 규모(우즈베키스탄 14,148백만원에 이어 키르기스스탄 4,188백만원, 2018년 기준)이며, 7월 양자 회담을 통해 보건·의료, 농수산, 교통, 인프라, 전자정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KOICA는 키르기스공화국지원계획(CP)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의 총 3개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3개의 프로그램은 각각 공공행정, 농촌개발, 교육 KOICA 중기전략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도 진행 중인 국별 사업을 살펴보면 농림수산,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프로젝트 사업과 보건의료, 교육, 농림수산 분야에서의 민관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북방정책에서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사업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개발협력, 농업, 보건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⁴¹⁾ 또한 교육정보화지원사업, 해외

41) 외교부(2019)

농업기술개발사업 및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 사업 등을 개발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비슈케크 감염병원 개선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⁴²⁾ 신북방경제협력 추진전략에서는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협력 및 무역을 위한 원조 관점의 ODA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있으며, 농업기술 등의 직업훈련학교 운영 및 섬유 기술 이전 등을 언급하고 있다. KOICA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함께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또한 표에는 언급되지 않은 예비 및 후보 사업으로 행정정보공유 체계 구축, 식량안보 지원 사업 등 관련성이 있는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다.

〈표 23〉 키르기스스탄 2019~2021년 진행사업
(국별·개발 컨설팅·민관협력 사업, 예비 및 후보사업 제외)

사업명	CRS Code	KOICA 분야	CP	신북방정책 연계가능성
키르기스스탄 새마을 기반 지역개발 시범사업	43040	농림수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
키르기스스탄 유기농업정책 이행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	43040	농림수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
키르기스스탄 UNDP 소방구조 역량강화사업	15110	공공행정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	
키르기스스탄 이주민지역 지역사회기반 아동 건강증진사업	12220	보건의료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	
키르기스스탄 FabLab Bishkek 설립을 통한 고 등교육 질적 향상 사업	11420	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	
KF(Kyrgyzstan Friends) 실크로드 문화관광 사업	43040	농림수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양국의 총리는 7월 회담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천연식품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생산시설 설립을 통해 식품 가공 및 수출까지의 협조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또한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무상원조 기본협정 보충약정 등에 서명⁴³⁾도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KOICA에서 추진 중인 새마을 기반 사업 및 유기농업정책 역량강화 사업 등은 공동생산시설 설립 및 향후 가공수출에도 관련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신북방사업 추진 시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협력 가능할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가고자 하는 가운데, KOICA의 예비 및 후보사업으로 논의되는 행정정보

42) 이유미(2019 b)

43) 외교부(2019)

공유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은 디지털 사회 구축을 통한 정치적 안정성 확보 및 투자환경 개선을 기반하여 활발한 신북방정책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또한 중점협력국이 아니지만, 신북방정책 대상국가들로,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은 대통령 순방 이후 활발한 협력 움직임을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석유·가스 수출을 기반으로 중고 소득국으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다. 반면,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중 최빈국이며, 키르기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여전히 중저소득국으로 남아있다.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에너지 협력을 강조하면서, 에너지·산업·운송·금융·방송 분야를 망라하는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 프로그램’ 체결,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한-투르크메니스탄 표준화 MOU’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및 ICT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비에너지 부문으로는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세종학당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는 ICT, 5G 등 첨단산업 분야 및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 경제협력프로그램인 Fresh Wind를 통해 농업,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구상하고 있다. 또한 무역 산업·에너지 등 경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자 한·카자흐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 및 협력 방안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며, ‘관세분야 상호인정 협정’을 서명함으로써 세관 절차상의 물류 비용절감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수월한 수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타지키스탄은 신북방정책 하에 올해 1992년 수교 이래 최초의 최고위급 인사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등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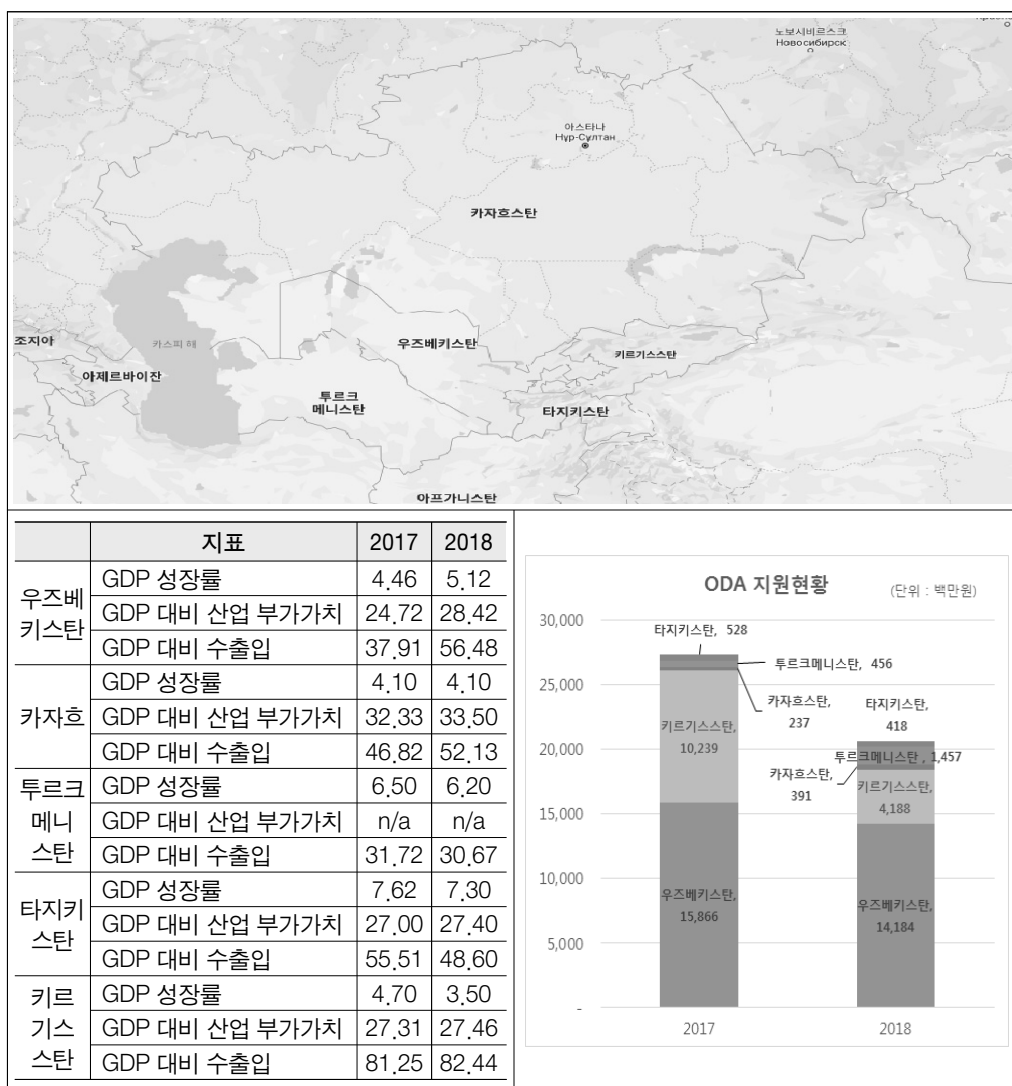
현재 진행 중인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으로의 KOICA 사업은 많지 않다. 다만, 향후 ODA 사업 발굴 시, 투르크메니스탄의 ‘역내 수송 허브화 전략’ 및 카자흐스탄의 ‘산업혁신프로그램 2030’ 및 ‘국가발전전략 2050’과의 연계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지키스탄의 경우, 구체적인 신북방 사업은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목화 및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또는 수자원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4〉 중앙아 3국 2019~2021년 진행사업(국별 사업, 예비 및 후보사업 제외)

사업명	CRS Code	KOICA 분야	신북방정책 연계 가능성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직업훈련원 역량강화사업	11330	교육	√
타지키스탄 전력소외 지역 전력망 구축 사업	23630	기술환경에너지	√

중앙아시아에서의 신북방정책은 우즈베키스탄을 전략적 거점으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으로 확대해 나아가고자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내륙국의 단점을 보완하며 물류거점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구축 및 산업 다각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및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가 간 물류체계를 확대해 가고 있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도 활성화되고 있어,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시스템 구축 및 기술 표준화 관련 삼각 협력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25〉 주요 중앙아시아 현황



신북방정책* - 섬유, 농기계, 자동차, 플랜트·건설 등 협력 강화 - 의료·제약·디지털 헬스케어, ICT 등 파트너십 구축 - 표준협력, 무역투자 사절단 등 협력 기반 구축 - 우즈베키스탄 전자무역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사업 발굴, 타슈켄트 종합병원 건립 사업 등 - 산업·에너지 ODA마스터플랜 마련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 참고하여 추정	KOICA CP* - 미래세대 역량강화를 위한 포용적 직업기술교육 -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효과적인 질병 예방·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적 역량강화 -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 *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	---

3) 아제르바이잔(코카서스 3개국)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코카서스 3개국과의 경제협력은 중앙아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에 걸쳐 미미한 상태이다. 산업협력 수요 등은 있으나, 신북방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중점협력국으로 비록 지원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개발협력 분야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분야에 의존도가 높으며, 원유·가스부문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경제 다각화를 위해 농업 관광업 등의 비석유 분야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르메니아의 경우 농산물 가공품 및 금속제품의 가치사슬을 확대하고, 물류 인프라 구축에 대해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조지아는 기업 및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KOICA는 아제르바이잔지원계획(CP)으로 ‘균형성장을 위한 농촌 및 지역개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 역량 개발’, ‘혁신 기술 기반 정부역량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의 총 3개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3개의 프로그램 중 두 개는 각각 농촌개발, 공공행정 CPS 및 KOICA 중기전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은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등 다수의 전략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6〉 아제르바이잔 국가협력전략 중점협력 분야별 지원방향 및 KOICA 지원방향

CPS	KOICA
통신	과학기술혁신 중기전략
• 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 • 통신 분야 인력 교육 및 훈련	• 개도국 스스로 성장 가능한 혁신기반 경제 구축: 개도국의 혁신시스템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에 기반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
물관리 및 보건위생	보건 중기전략, 물 중기전략
• 수자원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 취약지역 주민 보건 환경 개선	• 모든 인간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 보장: 모든 사람이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 •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의 물: 안정적인 물 공급, 물 이용 효율성 증대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경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복원력 확보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공공행정	공공행정 중기전략
•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지원 • 공공부문 인력 역량강화 지원	•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거버넌스: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효과성, 책임성 포용성을 갖춘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소에 기여
지역개발	농촌개발 중기전략
• 농업기술 전파, 교육 및 훈련 실시	• 농촌 지역주민의 포괄적 웰빙이 보장된 삶: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을 통해 모두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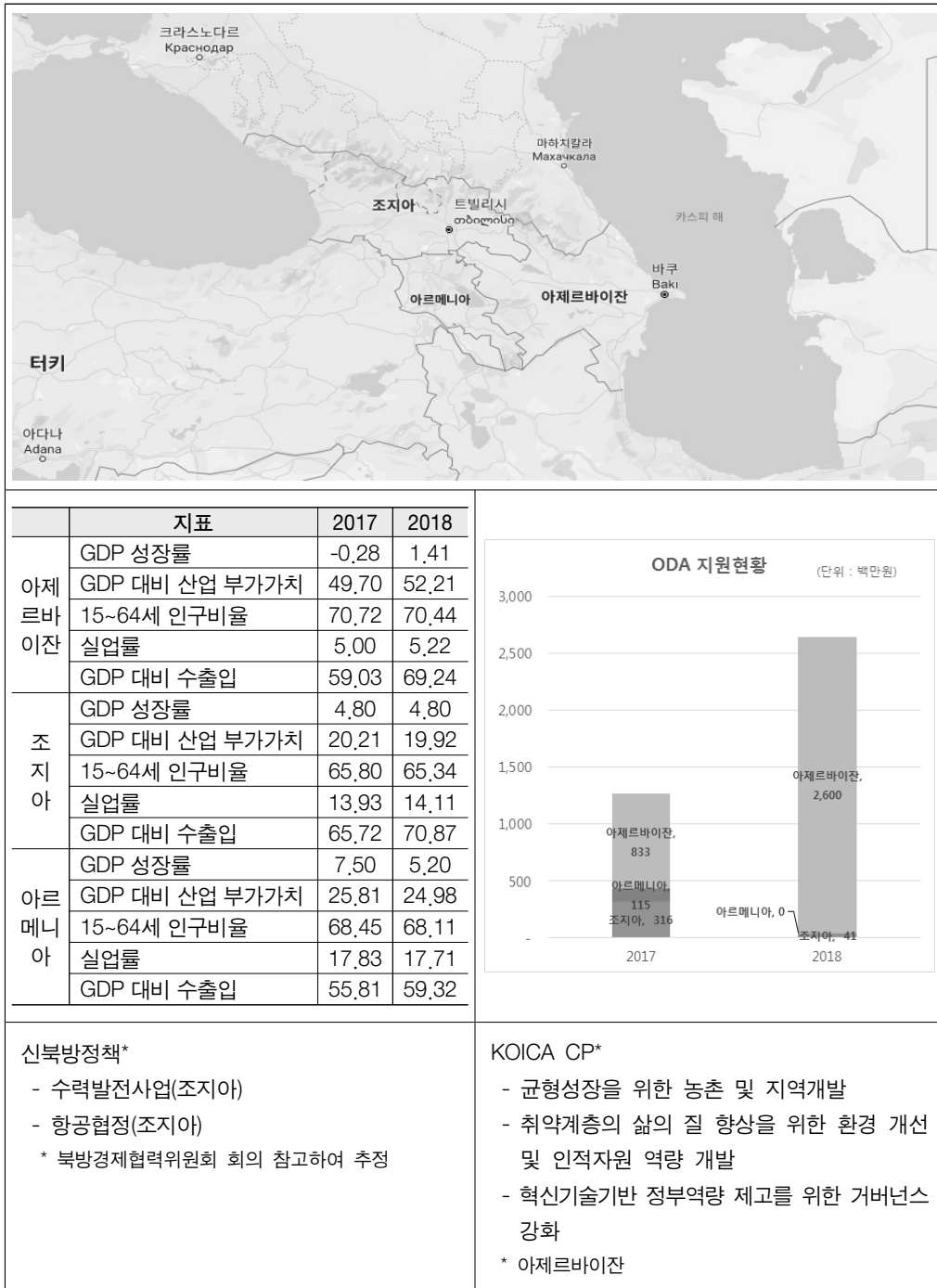
2019년도 진행 중인 국별 사업을 살펴보면 교육,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분야에서의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북방정책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자원개발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제조업, 농업 및 정보통신 등의 강점분야를 내세우는 협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OICA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함께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또한 표에는 언급되지 않은 예비 및 후보 사업으로 정책 로드맵 사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표 27〉 아제르바이잔 2019~2021년 진행사업(국별 사업, 예비 및 후보사업 제외)

사업명	CRS Code	CPS 분야	KOICA 분야	CP	신북방정책 연계가능성
아제르바이잔 교사역량강화 및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11130	공공행정	교육	혁신기술 기반 정부역량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아제르바이잔 코자밴드지역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	14020	물관리	기술환경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 역량 개발	
아제르바이잔 IOM 물공급시스템(카흐리즈) 구축 지원사업	31140	물관리	농림수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 역량 개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의 경우, KOICA 사무소가 부재하며, 연수사업 및 소규모무상원조 사업 등만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국별 프로젝트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아직은 교류가 전반적으로 미미하나, 지경학적 의미에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보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로, 산업 다각화 및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3국은 공통으로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에 적극적이며, 중앙아시아를 통과하여 유럽으로 이어지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농업, 관광업 등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며 산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어 관련 ODA 사업 및 삼각협력 사업으로 발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상으로 전력 효율화 방안 모색에도 공통적인 관심을 보여, 전력망 구축 관련 사업에 정부 부처 사업과 연계 하여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8〉 주요 코카서스 현황



중점협력국 및 신북방정책의 주요 거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부지역(몽골, 중앙아시아 5개국, 코카서스 3개국)에서의 KOICA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을 살펴보면, ‘물류 인프라 교통안전 개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복원력 강화’, ‘포용적 농목축업 개발 및 농식품 안전성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향상’, ‘미래세대 역량강화를 위한 포용적 직업기술교육’,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효과적인 질병 예방·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적 역량강화’,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 ‘균형성장을 위한 농촌 및 지역개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 역량 개발’, ‘혁신기술 기반 정부역량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등의 CP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공공행정, 교육 및 농촌개발 분야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향후 해당 분야에서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신북방정책 하에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협력사업들로는 교통물류 인프라, 보건의료, 농축산분야 산업화, 무역 활성화 등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점점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 및 국가별 패키지 형식의 사업구성은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간 협력관계 수립 및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국가와의 신뢰 기반을 토대로 동북아 평화 구축 및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들 속에 신북방정책은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차별화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 및 추진 과제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외교 파트너십 구축에 ODA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신북방정책에 부응하는 ODA 추진이 요구되는 만큼, KOICA 지원 대상국 중심으로 기존 전략 및 사업 방향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신북방정책에서의 ODA는 일방적인 공여국-수원국의 관계가 아닌 파트너십 강화를 바탕으로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전략적 수단으로 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정책 기획 및 이행과정에 협력함으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여 함께 성장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협력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통합적 체계인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효과적인 국가 간 협력을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대표적 정책을 기반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을 위해서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만 가능할 것이다. 신북방정책 내 무상 ODA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전자무역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사업 발굴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산업 에너지 ODA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형 ODA 추진모델 수립 및 신북방정책과 연관된 ODA 브랜드 사업 개발 등이 언급될 예정이다. 그간의 북방지역에 대한 정책과는 달리 현 신북방정책은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북방경제권과의 협력에 있어 KOICA의 전략과 신북방정책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그 가능성을 고려하고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회(국사협)⁴⁴⁾을 중심으로 융합 ODA를 확대해 갈 필요도 존재한다. 현재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북방정책 관련 논의도 국사협을 통해 발전시키고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44) 국사협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ODA 사업 효과를 높이고 개발도상국과의 상생·번영을 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에 발족한 협의체로 기획재정부·외교부·국무조정실·한국수출입은행·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산시·시티넷(CityNet) 등 40여 개 기관이 참여 중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 및 사회 발전은 잘 알려져 있으며, 경제사회 발전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국제적인 평가도 있다. 이를 토대로 연수사업, 역량강화 교육은 한국 ODA의 강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부처별 사업에 있어 ODA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국가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구축도 고려해볼 만 하다. 또한 부처별 다양한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에는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결과물에 대해 기술 또는 표준화에 대해 관련 교육 등이 뒤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개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가치사슬을 함께 고려하여 패키지 형식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 및 사업 효과성 제고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방국가들이 개발도상국임을 감안하여 전통적 산업을 위주로 협력사업을 제시할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반면, 아직 시장 및 규칙이 확립되지 않은 단계의 신산업의 경우 오히려 기회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을 협력사업으로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KOICA 사업리스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북방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그 방향성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북방정책 내 KOICA는 CPS상 중점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양자 무상원조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제시되는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들과도 다분히 유사성이 있다. 특히 공공행정 사업 및 농촌·지역개발, 인재양성 사업 등은 KOICA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온 사업들로 신북방정책 일환 사업으로도 충분히 강점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신북방정책이 산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구하고 있기에, 기존의 사업 방향성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기존 ODA전략이 수원국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수립되었기에,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신북방정책과 모든 면에서 부응하는 ODA사업을 이끌어 갈 수는 없다. 신북방정책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ODA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결국에는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대표무상원조기관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지향점을 향하지만, 그 가운데 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있거나, 또한 당장의 연계성을 고려하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유사한 사업 또는 연관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연계 가능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정도는 염두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정부에서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KOICA에서도 북방지역 중에는 가장 많은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다.

종합해보면, 중앙아시아 등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일궈온 국가들에 대해 에너지 자원으로 한계에 이른바, 현재 이들 국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산업 다각화를 통한 경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으로 혁신성장 및 디지털 성장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권 교체 등의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 및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로는 KOICA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CT 분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정부 시스템의 디지털화 등은 국내 산업 다각화는 물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KOICA의 對중앙아시아 사업들을 살펴보면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국별 프로젝트 사업 외에도 개발 컨설팅, 민관협력 사업, 연수 사업 등 다양한 경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그간 공공행정 및 교육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며, 신북방정책에서는 중앙아시아 물류 인프라 구축 및 의료분야 사업을 비중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주요사업 분야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여 KOICA의 역내 대표 사업으로 선정하여 분야별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북방정책에서의 협력을 도모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일수록, 관련 역량강화 및 행정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ODA 사업을 통한 효과성 제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는 중앙아시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앙아시아는 송금 경제에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을 고민하고 있으며, 인구평균연령이 상당히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이러한 수요가 많이 있는 가운데, KOICA에서는 이미 기존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들을 지원해 온바, 청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기술인력 및 창업 인력을 신북방정책과 함께 양성 가능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인력 양성 또는 기술 이전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관련 산업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신북방정책 내 협력사업으로 언급되는 의료분야 농축산분야 등의 산업 개발과 함께 관련 인재양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국내 다양한 지원정책과 의지 하에 효과적인 협력사업으로써 긍정적인 성과 창출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신북방 정책에서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자 한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국가 간 신뢰 구축 및 관계 강화, 나아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문화적 친숙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북방정책의 논의 대상인 협력사업들 역시 기존 부처별 다양한 사업에서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북방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전략 수립 및 사업들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 또한 KOICA는 한국의 대표 무상원조 기관으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을 주관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이라는 정부의 큰 프레임 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한국형 경제협력사업과 한국형 ODA사업은 서로 다르면서도 공통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기존의 KOICA가 가지고 있는 강점분야 및 개발협력 사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신북방정책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큰 틀의 협력사업들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간다면, 사업의 효과성 제고는 물론 한국만의 차별화된 접근으로 그 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신북방정책의 경제협력 사업들이 시작 단계에서 구체화 되지 않은 가운데, ODA사업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많은 소통과 논의를 통한다면 신북방정책의 차별화 및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많은 후속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태황. 2016. “중양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성과와 경제협력의 전략적 활성화” 국제통상연구 21(3): 81-103
- 김초룡. 2019. “키르기스공화국과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2(21).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민지영·김초룡. 2018.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33.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정호·정민현·김초룡. 2019.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사임과 카자흐스탄 정국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2(6).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정호·강부균·윤지현. 2017. 중앙아시아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신협력 방향. 전략지역심층 연구 17-02.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지원. 2017.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백다미. 2017. 북방에서 찾는 기회, 유라시아 경제권. 경제주평 17-36.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북방경제협력위원회·국립외교원. 2019.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 성과와 과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국립외교원세미나. (2019.4.26.)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019.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북방경제협력 위원회 제4차회의. (2019.3.27.)
- _____. 2018a. “신북방정책 중점추진과제 이행점검 결과 설명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회의. (2018.12)
- _____. 2018b. “신북방정책과 한-중앙아 협력과제.” 한-중앙아 포럼. (2018.11.06.)
- _____. 2018c. “신북방정책전략과 중점과제(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회의. (2018.6)
- _____. 2017. “북방경제협력의 비전과 추진방향.”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회의. (2017.12)
- 성원용. 2019. “혁신성장 핵심 경제축 ‘신북방정책’ 외연 확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04.26.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60389> (접속일: 2019.11.15.)

- 외교부. 2019. “제12차 한-중앙아 포럼 계기 중앙아 국가들과의 외교장관회담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0.17.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244&call_from=seoul_paper (접속일: 2019.11.15.)
- 외교부 유라시아과. 2019. “제 3차 한-타지키스탄 경제기술과학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외교부 보도자료 2019.06.25.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9312 (접속일: 2019.11.10.)
- 우준모. 2018. “신북방정책 비전의 국제관계이론적 맥락과 러시아 신동방정책과의 접점”
국제지역연구 21(5): 105-129
- 이명철. 2019. “러시아·몽골지역 농식품 수출 늘린다...신북방 정책 가동” 이데일리
2019.11.2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87846622688016&mediaCodeNo=257&OutLnkChk=Y> (접속일: 2019.11.20.)
- 이연호 외. 2018. 신북방경제협력 추진전략 및 기본 계획 수립. 서울: 북방경제협력협력위원회.
- 이유미. 2019a. “한·몽골, 양국 관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격상 추진” 연합뉴스 2019.03.26.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6086551001> (접속일: 2019.11.15.)
- _____. 2019b. “키르기스 “한국 신북방정책 환영”...이충리 “협력 잠재력 크다”” 연합뉴스
2019.07.18.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8154200001> (접속일:
2019.11.15.)
- 이재영. 2018.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러 3각협력.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해정·이용화. 2017.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요인” VIP리포트 17-28. 현대경제연구원
- 이현숙·윤유리. 2015. 동북아그린데탕트를 위한 녹색기술 협력방안 연구. 서울: 녹색기술센터
- 정동연·강부균. 2018. 코카서스 3국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34.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민현·김초롱. 2019. 카자흐·우즈베크의 경제 현황 평가와 한·중앙아 신경제협력 방향.
세계경제 포커스 2(8).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여천. 2014.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연구보고서13-13. 서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2019. 경제동향 카자흐 경제산업 동향 7,16-31. http://overseas.mofa.go.kr/kz-ko/brd/m_9004/view.do?seq=134695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접속일: 11.20)
- 진정미. 2018. “남북한 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 연구－분단경제에서 공존경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30(3):45-90
- 최은미. 2018.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54.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최정희. 2012. “중아시아 CIS지역의 정치경제 현황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2012(2): 95-119
- 최진형·박지원. 2018. 2019 세계시장 진출 전략 Ⅲ: CIS.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국제협력단. 2019. 2018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국외문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9. "Country Report."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Fumagalli, M. 2016. "Growing inter-Asian connections: Links, rivalries, and challenges in South Korean-Central Asian relations" *Journal of Eurasian Studies* 7(2016):39-48
- IMF. 2019.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available at <https://www.imf.org/en/Publications/REO/MECA/Issues/2019/10/19/reo-menap-cca-1019> (접속일: 2019.12.01.)
- Kment, P., Krepl, V. and Kapila P.F. "Development Assistance and Poverty Reduction in Central Asia" *Agricultura Tropica et Subtropica* 47(1): 36-41
- Koo, C.M. 2018. "The Current status of and challenges for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Presented at the 2018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Economic Development(NICE) on 30-31 January, 2018, Niigata, Japan.
- Lee Jae-Young. 2017. "The New Northern Policy and Korean-Russian Cooperation_Valdai" Valdai papers #76.
- OECD Stat. 2019.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available at <https://stats.oecd.org/> (접속일: 2019.12.02.)
- United Nations.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New York: United Nations.
- _____. 2019. "2019 Global Index: country profiles," available at https://github.com/sdsna/2019GlobalIndex/tree/master/country_profiles(접속일: 2019.12.01.)
- World Bank. 2019. "Doing business 2020: Comparing Business Regulation in 190 Economies," available at <http://hdl.handle.net/10986/32436> (접속일: 2019.12.02.)

〈웹사이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http://www.bukbang.go.kr/bukbang/>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 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list.do

(접속일: 2019.11.20.)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available at

<https://country.eiu.com/AllCountries.aspx> (접속일: 2019.11.20.)

IMF Data Mapper.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OEMDC/ADVEC/WEOWORLD?year=2019 (접속일: 2019.12.02.)

KOICA통계조회서비스.

<http://stat.koica.go.kr/ipm/os/acms/areaEacoEacoList.do?lang=ko>

(접속일: 2019.12.02.)

World Bank Data Indicator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접속일: 2019.12.02.)

별첨 1.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2017.7)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쫓붙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 ·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별첨 2.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중 ODA사업

추진부처	2019년도 과제별 ODA사업 추진계획
[과제 8] 인프라·환경 협력 확대	
환경부	□ 환경 분야 • 몽골 울란바토르 내 한국형 대기질 개선사업 - '20년도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를 위한 예산 확보(ODA) - 몽골 재무부 및 환경부와 실시 협의 □ 수자원 분야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노후상수관 개선 MP 사업 - 세부관망도 작성, 사업예산수립 등 시범사업 기본 계획 수립(2019. 1~2월) - 현지 세미나, 최종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실시(2019. 4월) - 후속 사업(인프라 ODA, 시범사업) 제안서 제출 • 우즈베키스탄 ICT 기반 수자원 정보화 MP 및 시범사업 - MP 수립 및 수자원 알고리즘 제시 관련 현지 보고회 실시 - 우즈베키스탄 실무자 정보시스템 개발 및 역량강화 초청연수 시행
[과제 9]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산업 통상 자원부	□ ICT 협력 • 우즈베키스탄 국가전자무역 플랫폼 구축 지원 □ 기계, 섬유, 유통 • 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 센터 조성 지원 • 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 조성지원
[과제 11]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협력 확대	
보건 복지부	□ 한국형 의료시스템 확산 • (현황) 의료인 연수 지속 및 한-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협력모델 기틀 마련 - (의료인 연수) 몽골, 러시아, 중앙아 등 북방지역 의료인 초청연수(총 43명, 2018), 몽골 방문교수(2018.10) 및 동문의 밤 개최(2018.12) - (우즈베키스탄 의료시스템 전수) 국립의료복합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18.12 KSP 발주), 협력센터 '19년도 예산 확보(5억 원) 및 보건전문관 파견완료(2019.3), 우측 응급 의료체계 강화 분사업 추진 준비절차 진행(2018.8) - (국제개발협력)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건립사업(EDCF)과 연계한 병원운영 컨설팅 실시(ODA) 및 2019년도 예산 확보(7.6억 원)

	• (계획) 연수 네트워크 확장 및 우즈베키스탄 협력모델 초기구축 지원 - (의료인력 연수) 학술교류와 연계한 동문의 밤 확대 개최(몽골→러·카자흐 추가), 몽골 연수대상 확대(의사·간호사→의료기사 추가/5월) - (우즈베키스탄 의료시스템 전수) 국립의료복합단지 마스터플랜 KSP사업 수행(연중), 보건의료 협력센터 개소 및 협력센터 운영 MOU 체결(4월),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 착수(2019~2023) - (국제개발협력)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자문단 선정(1분기) 및 병원 완공과 연계한 진료과별 운영 컨설팅, 인력연수 지속 추진
[과제 13]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문화 체육 관광부	□ 문화·체육·관광 ODA 활용 • 북방지역 국가 대상 초청연수 사업 활성화 - 문화동반자 사업 북방지역 국가 14명 선발 및 초청연수 실시 -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초청연수(몽골 등 고위급·실무급 연수) 실시 - 스포츠 지도자·행정가 교육과정, 태권도 초청연수, 체육용품 지원 등 • 몽골 관광ODA 사업 신규 추진(몽골 관광인력 역량강화, '19년~)
[과제 16] 다각적인 외교협력 기반 조성	
외교부	□ 북방경제권 무상원조 지원 • (현황) 우즈베키스탄·몽골 등의 국가개발계획 및 우리정부의 ODA 국별협력전략(CPS)에 따라 중점협력분야*를 중심으로 무상원조 지원 * CPS상 중점협력분야: (우즈베키스탄)교육, 공공행정, 물관리, 보건 (몽골)교육, 물관리, 보건위생, 공공행정, 교통 (아제르바이잔) 물관리 보건위생, 공공행정, 지역개발, 통신 • (계획) 진행 중인 양자 무상원조사업 지속 및 신규사업 추진 * 2019년 외교부(KOICA) 우즈베키스탄, 몽골, 아제르바이잔 ODA 예산: 우즈베키스탄 63.67억 원, 몽골 45.29억 원, 아제르바이잔 19.46억 원(총 128.42억 원)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9) 참고하여 재구성

연구정보 2019-23-127

신북방정책과 ODA전략 연계 방향 연구

발 행 2019년 12월

발 행 인 이미경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연구정보센터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1588-0434

팩 스 031)740-0260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주)명진씨앤피

I S B N 978-89-6469-540-1 9332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연구자료

연구정보 2019-23-127

ISBN : 978-89-6469-540-1 93320



신북방정책과 ODA전략
연계 방향 연구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1588-0434 Fax. 031-740-0260
<http://www.koica.go.kr>